

기본연구
2009-21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직구성과 운영방안

권영현 · 이충훈 · 이정수



기본연구
2009-21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직구성과 운영방안

2009.12

충남발전연구원

기본연구 2009-21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직구성과 운영방안

권영현 · 이충훈 · 이정수

발 간 사

공공디자인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며 적극 도입하여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도입 초기이지만 공공디자인이 추구하는 철학과 개념이 담긴 결과물이 하나 둘씩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참신한 감동과 함께 지역 위상과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을 새삼 실감합니다.

공공디자인의 효용가치는 단순히 지역이 지닌 고유한 이미지를 창출하는 외에, 지역의 환경, 문화, 산업에 거쳐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지역 주민이 자기 지역을 이해하며 관련 사업을 떠나가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격조 높은 환경에 걸 맞는 주민 의식을 갖추게 되는 귀중한 가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이와 같이 목적과 기대를 갖고 일찍 공공디자인을 도입하여 지난 일 년간 조례 제정, 행정 조직 구성,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 설립 등 활발한 사업 전개를 위한 기반을 다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공공디자인이 새롭게 출현한 영역이다 보니 선진 수범 사례 등이 부족한 여건에서 기본 방향과 사업 대상, 조직 구성 등에서 섬세하게 점검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직구성과 운영 방안 연구’는 공공디자인의 도입초기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충청남도가 다루어야 할 대상의 설정, 조직의 구성과 활성화 방안 등 구체적이고 현장에서 운용하여야 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가 충청남도의 정체성이 담긴 공공디자인 행정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을 확신하며 연구를 수행해 주신 권영현 연구위원과 이충훈 연구위원 및 외부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 김 용 응

연구목차

I

연구의 개요

연구 배경 및 목적/1 1. 연구 배경/1, 2. 연구 목적/2

연구 내용 및 방법/3 1. 연구 내용/3, 2. 연구 방법/4

선행 연구 및 연구 진행 /5 1. 선행연구 검토/5, 2. 연구 진행도/6

공공디자인의 정의와 영역/7 1. 공공디자인의 용어의 유래/7

2. 공공디자인 관련 영역 및 정의/8, 3. 공공디자인의 대상/10

4. 공공디자인 분류 특성/14

II

해외 공공디자인 관련 사례

일본의 경관 정책/15 1. 일본의 도시경관 정책/15, 2. 일본의 도시경관 행정/19
3. 주요 도시의 경관 행정/20, 4. 시사점/25

유럽의 공공디자인 정책/26 1. 영국의 정책 및 기구/26

2. 프랑스의 정책 및 기구/29, 3. 독일의 정책 및 기구/31, 4. 시사점/33

III

국내 공공디자인 현황

중앙정부의 조직과 법규/34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처 및 기관/34,

2.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의 관계/38, 3. 공공디자인 관련 법규/39, 4. 시사점/41

국내 지자체 공공디자인 현황/42 1. 서울특별시/42, 2. 부산광역시/44,

3. 대구광역시/46, 4. 인천광역시/47, 5. 광주광역시/48, 6. 지자체 운영의 특징/50

IV

충남 공공디자인 현황 및 문제점

공공디자인 인식조사/51 1. 절차 및 방법/51, 2. 조사 결과/51, 3. 응답 주요 내용/55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직 현황/56 1. 충청남도/56, 2. 시, 군/59 3. 관련 업무/61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의 문제점/63 1. 명확성이 결여된 목표지향/64

2. 실행력 부족한 근거법/64, 3. 제한적인 조직 및 인력/65, 4. 원활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65

V

정책 제안

영역 및 대상/67 1. 충청남도의 공공디자인 영역/67, 2. 공공디자인 대상/68

기본 방향/69 1. 역할 분담 및 행정 전략/69, 2. 법제 운용/70

전담 조직/71 1. 공공디자인 부서의 기능/71, 2. 공공디자인 부서 체계/72,

인식 및 기반 확산/73 1. 공공디자인 교육 체계화/73, 2. 민간홍보 방안/74

실행력 증대/75 1.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75, 2. 민간 단체의 활성화 방안 /76

VI

결론

요약 및 결론/78

연구의 특징 및 한계/80

참고 문헌 및 자료/81

제 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공공디자인의 급속한 확산

정부는 국정지표인 ‘글로벌 코리아’ 달성을 위해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디자인을 국가 원동력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 서울특별시 또한 행정 조직을 총괄본부장을 위시한 2명의 담당관, 6개 팀 80여명 규모의 전담 조직인 ‘디자인서울총괄본부’로 과감하게 개편하여 자연과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SOFT SEOUL’을 목표로 세계 유수의 디자인 도시를 기획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도 지난해 건축도시과 내에 전담 부서인 공공디자인팀을 신설하고 가급적 외부 디자인 전문가를 영입, 공공디자인의 저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공디자인조례 시행, 공공디자인위원회 발족, 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 개소)

- 불분명한 방향 설정

그러나 지역의 공공디자인 도입 단계에서 지역의 특성을 담아야 하는 본래 목적과 다르게 명확한 방향 정립을 못한 채 일본 지자체의 경관정책이나 국내의 공공디자인 선도 지역인 서울특별시에서 구상하고 수립해 놓은 디자인 정책과 기준을 답습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양상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의 브랜드력을 강화 시키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공공디자인 도입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대도시 위주의 기반 조성과 이미지를 갖추게 될 우려를 보이고 있다.

- 업무 조정의 어려움

신설된 공공디자인 전담 조직이 지금까지 행정 조직내 부서별로 분산 운영되어 왔던 디자인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하려 하면서 타 부서와 업무 교감이 원활한 시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① 사업 초기에 예상됐던 바와 같이 중앙부처에서 분산되어 집행·관리되는 공공디자인 사업이 충청남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업 부서마다 제각기 집행되며,

② 광역도의 위치에서 산하 시·군과의 공조된 정책의 전개와 도와 시·군간의 적정한 이미지 조율이 어려우며, 특히 중앙에서 기초지자체로 직접 사업비를 지원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경우 도의 의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사업 및 규제 of 실행력 부재

공공디자인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현실에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심의 기능 역시 구체적 실현 방안 없이 권고 요청 수준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 충청도의 경우 공공디자인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근거법이 없는 조례차원으로는 실행 및 규제의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충남의 공공디자인 정착에 앞서 행정 기능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영역의 규정, 업무 수행과정을 살펴보고 적합한 기능을 갖춘 유형의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부서간 또는 도와 시·군간의 업무 수행 시스템을 정비하여 실행력을 갖춘 업무 운영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충남의 공공디자인의 대상 및 분야 설정

공공디자인이라는 용어 및 분야가 새롭게 창출되었다고 하지만 유사한 사업이 소관 부서에서 다른 명칭으로 이미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대한 디자인 결정 및 진행 과정의 검증은 공공디자인의 범주에서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충남이라는 지역 여건과 요구에 부합하는 영역이 설정되어야 하며, 경관 분야와 중복되는 영역 등을 명료하게 구분하여야 함.

- 전담 조직 및 자문 위원회 구성 및 역할 제시

중앙 및 지방 공무원 직종에 디자인직능 분야가 신설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의 구성으로는 원활한 사업을 전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광역도 차원의 고유한 기능을 찾아내어 적합한 인력 분야 및 규모의 제시가 필요하다. 아울러 사업 시행의 심의 기능을 갖춘 위원회의 바람직한 역할을 재 정립한다.

- 역량 강화 및 주민 인식 확산 방안

충남도청 및 시·군의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이 수행하는 개발계획 및 조성사업 등의 사업 과정에서 협조 및 지원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구성을 제안한다. 또한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주민 의식 향상을 위한 정보 전달 및 교육 등 주민들에게 쉽고 흥미있게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충남의 지역 현실과 목적에 적합한 공공디자인 사업 대상과 효율적인 조직구성 마련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디자인 관련 용어의 정의/경관계획, 환경디자인,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등
- 유럽 및 일본의 공공디자인(경관) 정책 및 기구의 특징 조사
- 도 및 시·군의 공공디자인 관련 조직 현황 및 업무 특성
- 공공디자인의 이해 및 수용도, 관련 업무의 공유 및 자문의 수용, 조직 형태와 규모의 적정성, 다루어야 할 디자인 분야 등에 대한 담당자 설문 조사

1) 디자인의 유형 및 충남의 공공디자인 영역

- 도 및 시·군에 구성된 공공디자인 관련 조직의 위치 및 규모의 특징 파악
- 도청내의 각 부서별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파악
- 업소 간판, 주택의 외관 디자인과 같이 명료하게 구분 되지 않는 영역의 공동공간이 새로운 범주로 다루어지는 추세
- 주요 영역인 공공 공간, 공공 시설물 디자인 위주로 다루어지면서 이미지·정보 디자인 분야는 소홀히 다루어지기 때문에 공간 디자인, 시설물 디자인 위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충남의 현실에 부합되는 공공공간, 공공시설 외에 새로운 분야를 제시한다.

2) 디자인 사업 업무 프로세스 실태 조사

각 부서별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프로세스와 관련한 공공디자인 주무부서나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요구 조정 내용을 수용 여부와 시·군의 공공디자인 사업이 도에서 추구하는 방침과 일치하는지 알아본다.

3)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인식과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및 면접 조사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정책에 대한 인식도, 조직 및 위원회의 유무 및 적합성, 디자인 관련 사업의 진행시 어려운 요인 등을 설문조사와 담당자와의 면접을 통하여 파악한다.

4) 타 지역 및 선진외국의 사례 고찰

국내 타 지자체의 공공(도시)디자인 조례 고찰

- 조례의 내용 및 특색 있는 요소 (기본 계획 수립, 야간 경관, 위원회 구성 외의 조항)
- 선진 외국의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및 정책 고찰
- 영국 등 유럽 국가와 일본을 중심으로 디자인 정책 및 관련 기구의 특성 조사

2. 연구 방법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 실태 및 사례조사(도청 및 일본 현지) 외에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며 일본 현지조사는 2007년 고베 시청과 교토 시청을 방문하여 브리핑 받은 내용과 자료를 토대로 한다.

1) 문헌연구

선행연구 : 공공디자인 정책보고서 및 경관 조례에 관한 연구보고서
공공디자인 사업 가이드라인, 지자체 디자인 행정 매뉴얼
공공디자인 및 도시디자인 관련 지자체 조례 내용 분석
경관 및 도시디자인 관련 법규 및 조례의 상호 연관성 및 적용성

2) 실태 및 사례연구

도청 실국별 디자인 관련 업무의 파악(업무 분석 및 설문)
공공디자인 관련 수행 사업의 업무 흐름 및 부서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정도
일본의 주요 지역 경관 관련 법규 및 추진 정책과 서울특별시의 경관 지침 및 도시디자인 관련 조례 및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조사

- 조사지역 : 일본의 경관 선도지역 (고베, 후쿠오카 등), 서울시 및 수도권 지역
- 조사내용
 - 공공디자인에서 다루어지는 영역
 - 공공디자인 업무 구성 및 부서간 업무 공유 방안
 - 공공(도시)디자인 조례의 구성
 - 공공디자인 주요 정책 및 시민 협정 등 민간부문의 참여 방안 및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 실태의 조사

3) 설문조사

충청남도의 공공디자인 담당 공무원(공공디자인팀)은 직접 인터뷰로, 충청남도 및 시·군 관련디자인(도시, 건축, 개발, 환경) 분야는 설문방식으로 조사한다.

- 조사개요
 - 목적 :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업무 개선 방안
 - 대상 및 규모 : 충청남도 및 시·군 공무원, 사전 조사로 규모 파악
 - 방법 : 인터뷰 및 설문지 배포 및 수거(우편 및 팩스, e-메일)
- 조사 내용
 - 공공디자인의 인식과 충남 공공디자인이 나아갈 방향, 공공디자인 분야
 - 관련 사업의 수행 경험과 업무 과정에서 애로사항, 도 주무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 정도(시·군의 경우 각 지역의 디자인 관련 조직의 운영실태와 충청남도의 공공디자인 기본 계획안의 수용 태세, 자문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등)

3. 선행연구 및 연구진행

1. 선행연구 검토

공공디자인이 파생되지 오래되지 않은 분야인 만큼 직접 관련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지 못한 채 주로 정책 보고서 및 전반적인 행정 디자인을 다루는 지자체 활용 매뉴얼 위주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디자인 출현 이전의 연구는 국내 및 일본의 경관시책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였다.

- 박찬숙(2006) ‘쾌적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정책보고서’는 공공디자인의 기준, 의식, 수행 조직, 인력육성, 지원환경의 현황 및 문제점과 통합적 체계적 계획과 시스템, 설계 인력, 운영위원회의 필요성과 관련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함
- 산업자원부(2007) ‘지자체 디자인행정 매뉴얼’⁽¹⁾은 공공디자인 뿐 아니라 디자인 전반에 걸친 행정조직 체계를 비롯하여 계획 수립과 시행, 관련제도의 정비, 국내외의 디자인 행정사례를 담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2009) ‘공공디자인사업 가이드라인’⁽²⁾은 지자체에서 공공디자인 도입시 조직구성, 관련제도 수립,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을 담고 있음
- 정경석, 하창현(2008) ‘새로운 도시전략으로서의 공공디자인과 도시전략지자체의 역할’은 공공디자인 영역의 확장 필요성과 개별 시설물 보다 위치하는 공간과의 조화가 우선시 되며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올바른 이해의 정립을 요구함
- 임만택(2005) ‘공공문화에서의 공공디자인’ 국가 차원에서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 발전시키고, 국가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디자인법 등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함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 서울시를 모델로 하는 전문 조직의 구성, 지원환경 및 여건 마련과 부서를 넘어선 **통합적 시스템 마련**을 다루고 있음

이미 수행되고 있는 각 부서의 디자인 관련 고유 사업을 디자인 주무부서로 통합하여 이양하거나, 민선시대 특유의 지역 이미지 찾기인 색다른 모습 갖추기에 몰두하는 지자체에서 지역 이미지를 조율 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음

첫째, 우리 지역에 적합한 공공디자인의 개념과 영역을 정립 시키며,

둘째, 조직 구성의 **양적 팽창 없이도 주무 부서가 총괄 관리**할 수 있으며, 도청내는 물론 **시·군과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실질적인 업무 프로세스 마련이 실효성 있는 전담 조직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1)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간된 디자인 행정 매뉴얼로 공공디자인의 영역이 처음 언급되었다.

(2)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간된 공공디자인 관련 가이드 매뉴얼로 영역 및 사업 방법을 세분하여 수록하였다.

2. 연구 진행도



(표1) 연구 진행 체계

4. 공공디자인의 정의와 영역

1. 공공디자인 용어의 유래

(1) 공공(公共 Public)⁽³⁾

- 공공(公衆)의, 일반 국민(대중)의 / 사용 주체
- 공립의, 공설의, 정부의, 국가의 / 설치 및 관리 주체
- 지역(local), 체계나 정형성이 없는 개별의 범주와 구분하는 의미로도 쓰인다.
- 사적 공간의 반대 개념으로 규범, 예절 등이 요구되는 공간
- 보편성을 띤 일반적인 수준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2) 디자인 (Design)

디자인이란 개념은 사물의 재료와 구조, 기능과 아울러 미적 요소나 조화를 고려하여 형태 및 형식을 도출해내는 종합적인 계획·설계를 말한다.

디자인의 영역은 인간의 근본적인 생활 양태인 생산, 커뮤니케이션, 환경 형성이라는 행위와 연계, 프로덕트 디자인(제품디자인),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시각디자인/그래픽디자인), 환경 디자인으로 크게 대별된다.

	시각전달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	
2차원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 및 홍보 디자인 • 편집 디자인 • 아이덴티티 디자인 • 타이포그래픽 디자인 • 레터링 디자인 • 일러스트레이션 • 웹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텍스타일 디자인 • 벽지디자인 • 인테리어 패브릭디자인 		공예 패션
3차원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키지 디자인 • POP 디자인 • 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기 디자인 • 가구 디자인 • 액세서리 디자인 • 잡화 디자인 • 전기/가전 디자인 • 문구/완구 디자인 • 운송수단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환경 디자인 • 인테리어 디자인 • 조경 디자인 • 스트리트퍼니처 디자인 • 디스플레이 디자인 • 무대 디자인 • 랜드스케이프 디자인 	
4차원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CF디자인 • 영상 디자인 • 애니메이션 디자인 • 가상현실 디자인 			

(표 2) 디자인 영역의 횡적 종적 분류

(3)라틴어 푸블리쿠스(publicus, 인민)에서 유래, 군중(crowd)의 의미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공공과 개별간의 비교 우위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공공디자인 관련 용어 및 정의

(1) 경관계획(景觀計劃 Landscape Plan)

도시 전체나 국토의 풍치까지 포함한 인공적·자연적 환경을 보다 인간적이고 미적인 공간으로 조화있게 창출하기 위한 종합적 응용 과학기술을 일컫는다.

- * 협의 : 시설의 건설에 따른 영향이 경관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예측과 그것에 근거한 시설 및 그 주변의 경관조절방법의 구축
- * 광의 : 경관 이미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지역 혹은 지구의 현재 경관이나 경관 동향을 파악, 그것에 근거하는 경관 형성의 목표 이미지를 설정하고 실현하는 것

(2) 도시디자인(都市設計 Urban Design)

도시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해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윤곽·색채·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일컫는다. / 도시 계획의 한 영역

- * 독립된 분야로는 19세기 영국의 뉴타운 정책에 활용이 시작되었고, 미국에서 뉴커뮤니티 정책의 수단으로 채택 되어짐
- 인간이 실제 공간경험에서 얻은 도시의 이미지로서 어떻게 그 이미지를 계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정신과 영혼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시각적 디자인 (Michael Trieb, ‘도시디자인 : 이론과 실무’)
- 도시공간의 공적영역 혹은 공공적 성격을 가진 사적영역에서 수행되는 공공디자인 (백선희, 서울 도시디자인 전략 연구)

(3) 환경 디자인(環境 Enviroment Design)

건축과 실내 디자인과 같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창출하는 디자인 분야로서 도시나 지역과 같은 광범위한 지역 계획에서부터 좁게는 가로등, 벤치와 같은 가로 시설물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을 말한다. / 디자인의 한 분야

- * 엑스테리어 디자인(exterior design : 도시계획, 건축, 조경, 정원, 광장, 도로 및 부속 제설비)과, 건축물의 내부인 인테리어 디자인(interior design: 실내계획, 디스플레이)으로 분류할 수 있음.

(4) 건축 디자인(建築)

건축물의 배치, 규모, 구조, 내외부 공간, 미관, 채광, 음향 따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도 및 장소에 적합하게 건축물 안팎의 형태를 설계하는 행위

- * 환경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엑스테리어 디자인(exterior design)과, 건축물의 내부인 인테리어 디자인(interior design)으로 구분 할 수 있음.

(5) 유니버설디자인(公用化 設計 Universal Design)

-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범용(凡用) 디자인’ 이라고도 불리며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와 상관 없이 모든 사람이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구, 시설, 설비를 설계하며 환경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사용자 관점, 디자인이 갖추어야 할 철학

(6) 공공디자인(公共 Public Design)

- 디자인의 주체와 객체, 지향하는 가치·역할 등에 있어 기성의 상업디자인과 구별된 개념으로서 공공디자인 주체는 기업이라기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으로서 그 객체는 특정한 소비자라기 보다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공공적 디자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권영걸)
- 공공을 위한 도시 및 공공공간에 대한 설계를 통해 도시 고유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도시경관을 심미화 하는 것이라고 최현정은 보편화 되어 있는 공공미술의 개념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
- 국회에 계류중인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의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을 공공디자인 정책에 의해 심미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로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 영역에 따른 분류, 실행과정

공공디자인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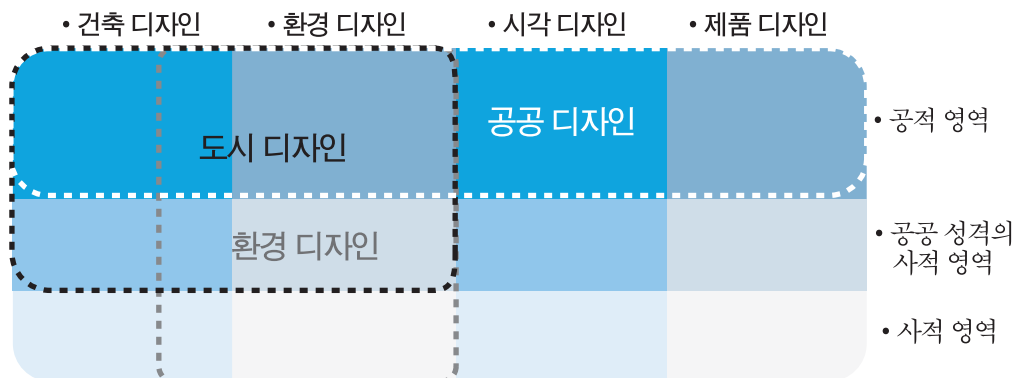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 다중 활용을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한 공간이나 시설물로 다중이 직접 공간과 접하거나 시각적 청각적인 간접영향을 받는 범주에 속한다.

설치 주체 : 공공기관, 기업, 개인

사용 주체 : 개인이 독점 사용하거나 조망할 수 없는 대상물

사용 영역 : 사적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

추구 철학 : 전체 안에 조화를 위해 소형, 보편, 간결함을 추구



(그림 1) 공공디자인의 영역

3. 공공디자인의 대상

공공디자인의 대상은 경관, 도시 디자인, 환경디자인간에 공유·교차하는 영역이 많으며, 일정한 기준이 없이 각 행정 주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공공성 구현이라는 목적을 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시행 주체가 되어 제작하고 관리하는 영역을 협의의 공공디자인 영역으로 볼수 있으나 상업 간판이나 건축물의 외관과 같이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공공 영역에 접하여 다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상도 포괄적으로 공공 영역에 포함시키는 추세이다.

(1) 문화체육관광부 제시 대상⁽⁴⁾

대분류	소분류	세부 대상 품목
공간디자인	옥외공간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용지, 하천, 가로, 야외주차장
	공공건축물	• 공공청사(시청, 구청, 동 주민센터, 연수원 등) • 중앙행정기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대상 건축물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등) • 지자체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대상 건축물 (의료원, 복지관, 학교, 연구소, 시민회관, 구민회관) • 정부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공항, 항만, 운하 등) •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 및 운영하는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동·식물원)
	기타공작물	• 공설 화장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 지하대피호, 천탑 등
시설디자인	옥외공간 관련시설물	• 조경시설물(화단, 분수, 조각 등) • 휴양시설물(휴게소, 매점, 화장실 등) • 유흥시설물(그네, 미끄럼틀 등) • 관리시설물(매표소, 출입문, 울타리, 주차관리소 등) • 문화관광시설물(관광안내소, 동상·기념비 등) • 도로구조물(교량, 철교,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등)
	공공건축물 관련시설물	• 공동구(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 시설 등) • 안전시설물(승강기, 방재시설, 방화시설 등) • 문화시설물(실내인테리어, 공공미술품 등)
	가로시설물 (기타 공작물 관련 시설물)	• 교통관련시설물(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볼라드, 가드레일, 지하철 출입구(환기구), 방음벽, 중앙분리대, 보도블럭, 가로등 등) • 편의시설물(휴지통, 공중전화, 벤치, 음수대 등) • 가로녹지시설물(가로 녹지대, 가로 화분대 등) • 상업시설물(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 도시기반시설물(맨홀, 소화전 등)
용품디자인	공공물품	• 공공기관 소유차량, 제복, 가구, 문구 등
	공공서식	• 법정민원서식(안내서, 신청서, 위임장, 각종 등본, 초본, 대장 등) • 정부 간행물(도서, 도면, 정부 홍보물 등) • 기타(홈페이지, 전자문서 등)
	대민 서비스용품	• 재난복구 물자 및 자재, 무인사무처리기 등
표지디자인	상징물	• 국가의전 상징물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상징물 • 지역 행사 상징물
	인증물	• 여권, 주민등록증, 자격증, 화폐, 우표, 자동차 표지판 등
	교통안내표지	• 경계표지(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 이정표지(목표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 방향표지(방향 또는 방향을 나타내는 표지) • 노선표지(주행노선 또는 분기노선을 나타내는 표지) • 기타표지(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표지 중 관광지도, 보행인표지, 주차장표지, 시설물표지, 긴급신고표지, 매표소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등)
	옥외광고물	• 간판, 전광판,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

(표 3)문화체육관광부 분류 공공디자인 대상

(4)문화체육부 발간한 공공디자인사업 가이드라인('09)에서 제시한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였음.

(2) 지식경제부 제시 대상⁽⁵⁾

영역분류	세부 대상 품목
공간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경관(Landscape) : 일정한 공간단위의 통일적인 외관 • 공공건물 : 관공서와 공공 문화시설 등 • 도로 : 인도와 차도 등 교통공간 • 개방공간(Open Space) : 공원, 광장, 녹지 등 • 역사공간 : 문화, 관광 등 특별 지정 지역 • 도시색채계획
시설물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조명계획 • 가로시설물 : 가로에 설치되는 각종 장치물 • 기타 공공시설물 및 개방공간에 설치되는 장치들 • 지자체 상징물 : 각종 국가 문장과 정부 기관의 표지 • 지자체 행사 상징물 : 국가 의례, 국제 행사 등의 상징물 • 지자체 정보시스템 : 정부 홈페이지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정부시스템 • 지자체 간행물과 포스터 : 각종 홍보물과 캠페인 포스터 • 지자체 상징물 : 지자체 C.I와 지역 축제 관련 상징물 • 교통안내시스템 : 도로 표지판, 신호체계 등 • 관광정보시스템 : 각종 관광정보시스템과 관광지안내판 등 • 옥외 광고물 : 간판, 전광판 등 각종 옥외설치 광고물
이미지·정보 디자인	

(표 4)산업자원부 분류 공공디자인 대상

(3) 서울 성동구 제시 대상

대분류	소분류	시설물의 종류
건축물	공공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시설(구청사) • 제1종근린생활시설(동사무소 · 도서관 등) • 문화 및 집회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민간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관지구 및 도로폭이 20m 이상인 도로변 신축 · 리모델링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에 관한 사항 • 건축물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가목에 해당되는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에 관한 사항
도시구조물	도로시설물	• 교량 · 고가차도
	도로부속시설물	• 보도육교 · 방음벽 · 방호울타리 · 가로등 · 도로명판 등
	문화관광시설	• 관광안내소 · 관광안내도 · 표석 · 동상 · 기념비 등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의 심의 대상은 제외)
가로시설물	가로녹지시설	• 가로수보호덮개 · 가로녹지대 · 가로화분대 · 분수대
	교통관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안내표지판 · 자전거보관대 · 주차장안내표지판 • 주차장관리소 (박스형) · 버스전용차선단속초소
	환경관련시설	• 휴지통 · 환경미화원대기소 · 공중화장실 · 전광판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두수선대 · 가로판매대 · 버스카드판매대 등 •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 점포 · 창고 • 자동차주차장 · 광장 · 공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해당되는(별표) 1. 건축물에 속한 광고물

(표 5)기초지자체(서울 성동구) 공공디자인 대상

(5)지식경제부에서 발간한 지자체 행정디자인 매뉴얼('07)에서 제시한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였음.

(4) 서울특별시 제시 대상⁽⁶⁾

	대분류	소분류
디자인공간	도로	•보행 가로, 자전거 도로, 자동차 도로
	광장	•교차점 광장, 역전 광장, 중심 대광장, 근린 광장, 경관 광장, 건축물 부설 광장
	친수 공간	•하천, 도시 내 수경 공간
	도시 공원	•소공원, 어린이 공원, 근린 공원, 대공원, 선형공원, 기타 공원
	공공건축물 외부 공간	
	옥외주차장	
	도시구조물 주변 공간	
	공개 공지	
디자인건축물	기타 공공공간	•디지털 영상매체
	행정 및 공공기반 건축물	•공공청사, 동 주민센터, 경찰서, 지구대, 치안센터, 소방서, 119안전센터, 우체국, 전화국, 관광안내소
	복지 관련 건축물	•보육 시설, 노인 복지 시설, 여성 복지 시설, 청소년 수련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교육 및 연구 관련 건축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공도서관
	문화 및 커뮤니티 건축물	•예술회관, 구민회관, 전시장,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환경 및 위생 관련 건축물	•자원 회수 시설, 재활용센터, 공중화장실
	의료 관련 건축물	•병원, 보건소
	기타 건축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동주택, 복합 건축물
디자인시설물	휴게 시설물	•벤치, 그늘막
	위생 시설물	•휴지통, 공중화장실, 음수대
	서비스 시설물	•자전거 보관대, 관광안내소, 공중전화 부스, 우체통
	판매 시설물	•가로 판매대
	통행 시설물	•버스 정류장 쉼터, 택시 정류장 쉼터, 마을버스 정류장 쉼터,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 지상 노출 승강기, 보도블록, 점자블록, 보차도 경계석, 육교, 교량
	녹지 시설물	•가로화분대, 가로수 보호 덮개, 가로수 지주대
공공시설물매체	교통 안전	•주의 표지, 규제 표지, 지시 표지, 보조 표지, 단속 표지, 노면 표지
	도로 안내	•이정 표지, 방향 표지, 방향 예고 표지, 공공기관 안내 표지, 사설기관 안내 표지
	주차 안내	•주차장 안내 표지, 주차장 이용 안내, 주차장 안내도, 장애인 주차 안내
	신호기	•차량용 신호등, 보행 신호등
	버 스	•버스 정류장 표지, 버스 노선 안내도, 버스 측면 정보 영역
	지하철	•지하철역 표지, 지하철 노선 안내도, 지하철역 종합 안내도
	택 시	•택시 외관, 택시 정류장 표지
	보행자 안내	•보행자 안내 표지, 보행자 방향 표지, 무단횡단 금지 표지
	도로명	•도로명판
	건물 번호	•건물 번호판, 건물 번호 안내도
	공원 안내	•공원 안내 표지, 공원 시설 안내도
	문화재 안내	•문화재 안내판, 문화재 표석
	관광 안내	•관광 안내소 안내, 시티 투어 매표소 안내, 관광 안내 표지, 관광 안내도
	자전거 도로 안내	•자전거 도로 안내 표지, 자전거 도로 노면 표지
	장애인 안내	•장애인 유도 사인, 장애인 안내 표지
	환경 정보	•대기오염 전광판, 도로 소음 전광판
	도로 교통 정보	•도로 상황 전광판, 교통사고 전광판
	대중교통 정보	•버스 정보 전광판, 지하철 정보 전광판
	기타 영상 정보	•디지털 영상매체, 옥외전광판
광고	장소 및 건축물 별	•건물 상단 가로형 간판, 지주 이용 간판, 전광류, 옥상간판

(표 6)서울특별시 분류 공공디자인 대상

(6)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 <http://design.seoul.go.kr> 에 게시된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였음.

(5) 공간문화 형성에 따른 공공시설 유형⁽⁷⁾

대상 시설		구상의 기본적 고려사항
물	물과 녹지의 중심축	하천공간문화의 형성을 위하여 연속성을 가진 천변의 녹질을 유지, 육성, 구성한다.
	친수기능의 도입	정비시 주변 공공단체의 협력으로 호안 및 방제물 등 구조물 형태나 디자인을 검토한다.
	교량의 디자인	정비에 있어 생활환경의 일부로 각각의 지역에 어울리는 교량의 디자인으로 한다.
	해안이나 천변의 정서적인 공간 확보	시민, 사업자 및 다른 공공단체의 협력에 의해 확보한 용지를 포함한 관리도로 등에 정서적인 공간의 확대를 도모한다.
	생활환경과 밀접한 소하천이나 수로, 못과 늪의 존중	소하천이나 수로, 못이나 늪 등 시민의 일상생활에 가까운 수변을 도시공간문화 공간으로 활용하여 보다 친밀한 수변문화공간을 형성한다.
도로	보행자 산책로	상가의 물, 천변이나 녹지·주택지 내의 유보도 등을 유지하고, 육성하며 구성한다.
	기타 보행자 공간	보도확장, 포장, 녹화, 사인정비 등을 추진, 안전하며 쾌적한 도로공간문화를 만든다.
	간선도로 등	간선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형태, 디자인, 색채 등 배려와 녹화 추진을 목표로 한다. 가공선 지중화, 육교 사인 등의 디자인 검토를 다른 공공단체의 협력을 얻어 진행한다.
녹지	시설녹지	공원, 광장, 가로수 등을 시민, 사업자, 다른 공공단체의 협력로 유지, 육성, 구성한다.
	사면녹지, 농지	양호한 도시의 녹지 보전을 위하여 다른 사업이나 정책과 제휴하여 유지, 육성한다.
거리	공공건축물	지역 특성이나 문화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친밀한 형태나 디자인, 색채 등을 채용한다. 시민에게 개방된 광장이나 녹지의 확보, 주변과의 연속성을 배려한 경계영역의 연출을 목표로 한다.
		역사적 건축물의 공공적 활용, 복원이용 등을 추진함과 아울러 새로 건설되는 공공시설 등도 지역의 상징을 목표로 한다.
공공사인	공공사인은 그 성격이나 대상지역에 따라 도시 전체 또는 지역 이미지와 조화나 통합 이미지 창출에 기여하도록 한다. 지역 정비에 예술, 스트리트 퍼니처 등을 도시공간문화에 정취적인 요소나 지역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활용한다. 또한 단일체의 공공시설정비에 있어 지역의 실정에 따라 예술, 스트리트 퍼니처를 채용하는 등 그 지역의 도시공간문화형성을 선도하는 공공시설정비의 역할 향상을 목표로 한다.	

(표 7) 공공문화형성 유형별 공공시설

(6) 충청남도 제시 대상

대분류	소분류	시설물의 종류
공공공간	도시환경	• 공원 (소공원 포함) • 광장, 운동장 • 어린이놀이터 • 교량 (철도교 포함) • 고가도로 • 지하차도 • 터널 • 보도 • 자전거도로
	공공건축물	• 공중화장실 • 공공안내소(관광안내소 포함), •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공공시설물	교통시설	• 가로등 • 도로명판 • 볼라드 • 펜스 • 방음벽 • 높이 2m 이상인 석축 및 옹벽 • 육교 • 지하도 • 택시 • 버스 등 대중교통 승차대 • 정류소 시설물 및 표지판 • 자전거보관대, 주차안내 표지판, 지하철 출입구 (개노피 포함) • 지하철 안내표지판 · 환기구(흡배기구) ·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편의시설	• 벤치 • 의자 • 쉼터 • 파고라 • 휴지통 • 음수대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공급시설	• 분 · 배전함 • 우체통, 소화전, 상수도 제어함, 신호등 제어함 • 공중전화 부스 이와 유사한 시설
	기타시설	• 가로수보호대 • 가로화분대 • 가로녹지대 • 분수대 • 분수대 • 맨홀뚜껑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공공매체	정보매체	• 이정표 • 안내표지판 • 방향유도 표시 • 규제사인 • 관광안내도 • 대기오염전광판 • 버스노선도 • 지하철 노선도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광고매체	• 현수막 게시대 • 지정정보판(광고판) • 고정형 행정 광고물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기타시설	• 벽화 • 슈퍼그래픽 • 생활정보지 배부함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표 8) 충청남도 분류 공공디자인 대상

(7)임만택, 공공문화에서의 공공 디자인, 건축, 2009. 5, p48 표를 인용 하였음.

4. 공공디자인 분류 특성

(1) 산업자원부의 분류

도시경관과 건물 및 도로 공간을 포함하는 공간 디자인 영역, 가로나 공공시설물, 개방 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 디자인 영역, 그리고 지자체 상징물이나 간행물, 사인 시스템 등 이미지 정보 디자인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분류는 대상물의 규모와 고정성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다른 부처의 영역 분류에 토대가 되었다.

대상을 크게 3개 영역으로 나누었는데 규모가 작은 용품이나 공간의 내부 공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편이며, 행정기관에서 일상적으로 다루는 사적 영역인 건물 입면이나 업소 간판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의 분류

산업자원부 분류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이용자의 사용 접근 단계의 정도에 따라 섬세하게 분류하고 있다.

공공공간을 옥외공간과 건축물로 분류하였으며 시설물의 분류에서도 옥외공간 관련시설물과 공공건축물 관련시설물로 분류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서 단일 영역으로 대분류한 이미지 정보디자인을 공공용품과 공공표지로 다시 분류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의 분류 체계를 좀더 세분화 시켰지만 거대하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행정 조직 구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현재와 같이 도입 초기에 소규모 조직으로는 여러 부서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일사불란하게 조정 진행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면이 있다.

(3) 서울특별시의 분류

앞서 제시한 두가지 유형과 대분류에서는 큰 차이가 없이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 매체류외에 광고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영역의 중분류에서 복지관련, 의료 관련, 통행시설물 등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소관 사업부서에 따른 실무 위주의 분류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4) 충청남도의 분류

대분류에서는 산업자원부의 모델을 따르면서 개별 대상을 명시한 소분류에서 영역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환경에 있어서도 충남의 특색인 농어촌의 환경이 명시되지 못했으며 건축물 역시 소극적인 분야만 제시하고 있다.

시설물 항목에서도 교통시설, 편의시설, 공급시설외에는 기타 시설로 일괄 구분했으며 공공매체에서도 일반적인 항목 외에는 기타시설 항목을 마련하며 각 소분류마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항목을 정하여 체계 분류가 섬세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 2장 해외 공공디자인 관련 사례

1. 일본의 경관 정책

1. 일본 도시경관 정책⁽⁸⁾

일본은 서구에 비해 근대 도시 형성이 늦게 시작됐지만 아름답고 품격 있는 국토 형성과 쾌적하고 질 높은 생활환경의 유지 및 창출 수단으로 경관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였다. 또한 전통적으로 지방분권 체제가 이어져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지역 주민이 서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어 살펴볼 요소가 많은 수범 대상이다.

(1) 경관 관련 법규 제정

일본은 리조트 개발 붐이 일기 시작한 1960년대 가나자와시에서 지역의 역사적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통환경보존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 전역의 자치단체로 조례 제정이 확산되기 시작하여 50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조례 형태로 경관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경관조례가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해 활용상의 한계를 보이자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틀인 경관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경관법에서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사업자·주민 등 4자의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행정력으로 추진할 뿐 아니라 사업자와 주민 의견의 수렴, 외부 협력기구를 조성하여 광범위한 협력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원활한 운영과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효과도 얻고 있다.

- 1968년, 가나자와시 ‘전통환경보존조례’, 쿠라시키시 ‘전통미관보존조례’ 제정
- 1968년, 쿠라시키시 ‘전통미관보존조례’ 제정
- 1972년, 교토시 ‘시가지경관조례’ 제정
- 1978년, 고베시 ‘도시경관조례’ 제정
- 1980년, ‘지구계획’ 제도가 창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경관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주민간 기본이념 공유의 미흡, 신청·권고 수준의 자주조례의 한계, 소송제기, 중앙정부의 세제·재정지원 불충분, 법적 근거 불충분으로 실효성 등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경관에 대한 국가의 명확한 입장 표현이 요구되었다.
- 2003년, 국토교통성에서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 정책 대강’을 제정, 경관 비보존에 대한 기본이념, 국민·사업자·행정의 책무를 명확히 규명, 경관행위 규제 절차 제정, 지원조치 창설,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강제력 행사 부분 필요성 인정 등이 보완되었다.

(2) 경관녹삼법(景觀綠三法)

2004년 6월 18일 법률로 공포, 같은 해 12월 15일 경관법 정성령(政省令)을 공포 하였으며, 2005년 6월 1일 전면 시행 하였다.

- ① 기본법의 성격과 경관계획, 경관정비기구 등 구체적 규제 및 지원조치 규정
- ② 도시 뿐 아니라 농촌, 자연공원 등도 대상에 포함
- ③ 지역특성이 반영되도록 지방조례에 규제내용을 유연하게 하도록 명시
- ④ 계획구역변경명령 등 필요시 중앙정부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기
- ⑤ 민간단체, 주민 등의 제안 등 참여기회의 제도화
- ⑥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조형물의 형태·의장에 관한 승인제도 도입
- ⑦ 경관협의회, 경관협정 등 경관정비보존기관 설치제도를 도입
- ⑧ 경관건축기준법의 규제완화, 예산, 세제 등 지원조치의 강구

(3) 총합성의 확보

경관법에 규정된 제도와 도시계획이 일체성을 갖도록 종합적 시책 마련이 요구되며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도시계획 : 고도, 풍치, 지구계획,
- ② 건축기준 : 조례, 설계, 단지 및 경관,
- ③ 옥외광고물 : 경관저해요인 규제,
- ④ 녹지관계 : 녹지, 수목보존, 녹화사업,
- ⑤ 공공시설 : 경관상의 중요한 요소,
- ⑥ 문화적 경관 : 문화재 보호 등

(4) 경관행정단체의 일원화

경관 시책의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인 정령시(政令市), 중핵시(中核市), 도도부현(都道府縣) 외에 시정촌도 도도부현의 사전 동의를 얻어 별개의 경관행정단체가 될 수 있다(시정촌과 도도부현의 이중 규제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음).

전국 158개 경관행정단체가 제각기 추진하던 경관행정을 일원화하여 행정의 중복과 예산 낭비를 개선하였고,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시정촌이 중심 역할을 하도록 체제를 정비하였다.

경관정비기구는 법인 또는 특정영리활동촉진법에서 규정하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 신청에 의해 경관행정단체의 장이 경관정비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

(5) 경관구역의 구분

경관구역의 구분은 구역별 규제대상과 내용을 세분화함으로써 일률적인 규제를 최소화하고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도록 하며 지역 주민의 의사 반영의 제도화, 협력 체제 구축, 정부의 재정·세제상 지원과 민간자금 조성을 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

경관지구	시가지의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해 도시계획차원에서 지정하는 용도지구(미관지구) 건축물 뿐 아니라 도시건축물의 형태, 의장, 조형물의 경관적 형성, 지역특성이나 목표에 어긋나는 개발행위 등이 규제대상에 포함됨.
경관계획구역	경관계획은 경관행정을 추진하는 구역을 지정하여 양호한 경관 형성을 위한 방침 마련으로 행위가 제한되는 건조물 및 수목 지정, 중요 경관 공동시설 정비 등을 정하는 것임 온천지 등 관광지의 외곽지역 토지,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조망권 내 또는 배경지역 토지, 하천, 호수, 해안, 항만 어항의 인접수면, 이미 양호한 경관의 계속 보존 구역,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 등을 고려한 지역특성에 어울리는 경관 형성이 필요한 토지구역 또는 그러한 필요성이 예상되는 지역, 지역간 교류의 거점이 되는 토지 구역 등이 대상임
준경관지구	도시계획 구역대상이 아니라도 경관지구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한 지구를 말함 도시계획 및 준도시계획구역에 인접한 구역 외 지역의 건축물 등의 건축행위를 대상으로 건축물 및 조형물의 형태, 의장, 조형물의 최고 최저 설치 제한, 개발행위 제한, 건축물의 높이, 벽면위치, 구조 및 부지에 대한 제한, 인증, 허가제도, 위반시정 조치 등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경작지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영농조건을 갖춰야 할 구역에서 권고 수준으로 설정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영농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다량이논밭 석축의 보전, 공동작업을 지원하며 경관정비기구의 협의 하에 권고대상지역의 농지이용권을 취득하여 경관작물의 육성을 관리하도록 함
경관정비지구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을 경관단체장이 지정하여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주민협의 조정, 경관주요건조물과 수목의 관리, 경작방치지역의 이용권 취득 등에 참여함

(표10) 일본의 경관지역 구분

(6) 행정 규제 및 지원

• 경관지구 및 경관계획구역에 대한 행정 규제

- ① 경관지구 규제 : 경관 형성을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조형물의 디자인, 색채, 높이, 부지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규제한다.
- ② 경관계획구역 규제 : 신고나 권고를 기본으로 하는 유연한 형태로 규제하고 건축물, 조형물의 디자인, 색채에 대하여 변경명령을 할 수 있다. 농지형질변경 규제, 경작방치지역 대책강화, 산림업 촉진 도모, 경관상 중요한 건축물, 조형물, 수목을 지정하여 적극 보전한다.

• 세제 지원과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

- ① 기존의 외관 보전을 위해 건축기준법상 제한의 일부 완화(고도제한, 건폐율 등)
- ② 경관중요건조물 및 부지가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평가액 인하로 상속세 감면, 소득세, 법인세의 적정 공제 시행
- ③ 경관법이 정한 사업, 경관계획구역 또는 경관지구 사업에 대한 조사나 사업 시행 도중 동기 부여를 위한 예산의 지원
- ④ 건물 수선, 안내판 설치 등 시읍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교부금 형식으로 지급
- ⑤ 가로 환경정비 사업은 시읍면이나 토지소유자에게 정부예산을 지원
- ⑥ 경관사업과 역사적 건조물 활용 정비 사업에는 사업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 ⑦ 정보 데이터베이스 정비, 경관교육 인재육성, 경관교육, 교재발간 비용 예산책정
- ⑧ 관광진흥 거점 공원에 경관중요건조물과 일체감을 이루도록 정비사업 추가하며 주변 녹지를 양호한 경관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급

건축물의 형태와 외장 제한 (인정제도)	대상 : 경관지구 내의 모든 건축물 제외 대상 : 경관중요건조물, 국보, 중요문화재, 특별사적명승천연기념물,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내 건축물 · 기존 건물 중 양호한 경관 형성에 현저히 부적합한 대상은 시읍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건축물의 고저 제한(확인제도)	역사적 거리, 양호한 중저층 주택지, 가로·원격조망·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경관상의 특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구역
개발행위 제한 (허가제도)	지역 특성이나 양호한 경관 형성에 지장을 주는 행위나 지역 경관과 현저하게 부조화를 이루는 행위의 제한으로 토지 개간, 토석 채취, 광물 채굴, 토지 형질변경, 수목 재배 또는 벌채, 옥외토석, 폐기물, 대생자원 등 퇴적, 수면 매립 또는 간척 등이 포함됨
경관중요 건축물 및 수목	역사문화성 및 공공성을 지닌 경관상 중요한 건조물과 수목을 적극 보전하기 위하여 단체장이 소유자의 적정관리 의무, 현상변경에 관한 단체장의 허가, 경관 유지 의무 등을 지정하며, 벽면선의 제한, 외벽 후퇴거리 제한, 일조권 등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줌 증축, 개축, 이전, 제거, 외관 및 색채 변경, 벌채, 이식 등은 허가가 필요함
경관중요 공공시설	경관법에 의하여 도로, 하천, 도시공원, 해안, 항만 등은 경관중요공공시설로 지정하여 경관계획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비할 수 있고 그 기준에 따라 허가함

(표11) 일본의 경관제도 세부사항

(7) 정책 결정 과정

- 1 제한** 대상지역과 사업내용을 지자체가 입안, 토지소유자,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이 경관계획 제안
- 2 처리 단계** 주민공청회와 설명회 필수 개최, 도시계획구역, 준도시계획구역은 경관심의회나 주민단체 의견 수렴, 사업주체가 도도부현이나 광역지자체 일때 시정촌 의견 청취, 경관중요시설 지정은 해당 시설관리자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
- 3 대상 구분** 필수대상 : 건축물의 건축, 조형물의 건설 등 개발행위
선택대상 : 야간 공중관람물, 조형물, 옥외 물건의 외관을 비추는 조명 등
행위제한 : 건축물과 조형물의 형태, 색채, 외장, 고저한도, 벽면위치 등
- 4 허가 절차** 건축확인제도 : 건축물의 높이, 벽면의 위치 등이 대상
확인 신청 → 확인서 발급 → 행위 착수 → 확인 표시 → 완료 검사 → 사용 제한 → 건축 확인 등의 단계를 거친다.

인정제도 : 건축물 및 조형물의 디자인과 색채, 고저 대상
시읍면장에게 신청 → 심사 → 인정증 교부 → 행위 착수 → 인정 표시 → 검사(경우에 따라) → 시정 명령(경우에 따라) → 인정 등의 단계를 거친다.

조형물의 고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신청 내용의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적합 의무를 부과하여 수행하는 절차가 첨부된다.

인정제도 : 개발행위 대상
허가 신청 → 행위 개시허가 → 시정 명령 → 허가 순이다.

권고 변경제도 : 건축물 및 조형물의 디자인과 색채 대상
경관 특성을 고려하여 지구내에서 요구되는 사항으로 변경
(높이는 30m 이하, 색채는 지붕색채로 제한)
신청 → 심사 → 권고 → 변경 명령 순이다.

2. 일본의 도시경관 행정

(1) 운영 방식

일본 경관관리 운영의 특징은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개선 노력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적용 대상 지역의 자원이나 시민합의 과정의 성격에 따라 종합관리형, 공공주도형, 중간관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종합관리형

도시 이미지의 형성이 자연지형이나 풍부한 역사자원으로 이루어지는 도시에 많이 적용되며, 주민 지지가 용이한 대상을 위주로 주민 협의를 통한 기본경관 형성 가이드라인을 유도하는 동시에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 경관 시책을 마련하고 제도적인 틀로서 경관조례를 통해서 운영하는 형태이다.

이 방식은 전반적인 경관의 질이 보장되며 사업 시행전에 영향을 검토하여 조화로운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민합의 과정의 어려움과 개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 공공주도형

자연적 요소나 역사적 요소가 빈약한 여건에서 적극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중소도시에서 주로 선택하는 유형이다.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사업을 우선 전개한 후 파급 효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방식이다.

장점으로는 짧은 시간 안에 수준 이상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자발적인 주민 참여로 호응도가 높다는 점이나, 변화가 빠른 도시에는 적합한 반면, 시가지 조성이 어느 정도 완료된 도시에는 적합하지 않다.

• 중간관리형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관기본계획 등의 가이드 라인을 책정하여 운영하는 동시에 시가지 중심지 등의 경우 공공주도형을 병행하여 운용하는 방식이다.

(2) 광역지자체의 경관행정체제

경관행정 도입 초기단계에서는 행정조직이 기획·도시계획·문화 교육으로 분류되어 우리 행정 조직의 계 단위 규모로 운용되다가, 점차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4~10명의 과 또는 실의 규모로 독립 운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역지자체의 경관행정체제는 행정 내부의 조정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관련 타부서와 의견조율을 원활하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상설 시스템 및 사안에 따른 조정시스템, 비공식적인 조정 방법 등 다양한 대화 경로를 갖추고 있다.

도시정비국 계획부 도시경관실	실장, 경관계장, 주사, 주임, 기사
도시국 도시부 도시경관디자인실	실장, 도시경관담당(주사, 부주사, 기사) 광고물담당(주사, 주임주사, 주사)
도시계획국 도시기획부 도시디자인실	실장, 과장, 과장보좌, 계장, 계원
주택도시국 도시계획부 도시경관실	실장, 광고물/조사기획/지구경관정비/ 마치나미경관/도시디자인조사연구담당
도시계획국 계획부 어반디자인실	실장, 주간, 경관계장, 주사, 담당
도시계획국 도시디자인실	실장, 실장보좌, 주사, 주임기사, 전문원
도시정비국 도시관리부 도시경관실	실장, 계획계/추진계/옥외광고물계/ 경관형성주임

(표12) 일본정령도시의 경관행정조직체계 예

3. 주요 도시의 경관 행정

(1) 후쿠오카시

후쿠오카시는 일본의 도시 중에서 일찍부터 도시경관조성 행정에 전문 조직인 경관디자인담당부서를 두는 등 디자인 도입과 적용에 있어 앞선 행정과 꾸준한 변화를 모색하여 디자인도입 및 운용에 있어 수범 사례 도시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후쿠오카 시는 ‘도시정비국’에서 ‘도시경관조례’에 의한 지역의 개성과 특성을 살려내는 도시경관조성을 하고 있다. 또한 ‘도시경관형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 ‘조례’와 ‘계획’에 의한 부서간의 횡적인 협의시스템을 갖춰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계획에는 주민과 협의과정을 거쳐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도시경관디자인 관련 행정조직

후쿠오카 시는 ‘도시정비국’에 5개 부와 2개 사무소를 두고 도시경관조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도시관리부’에는 ‘도시경관실’을 두고, ‘도시경관조례’를 운용하면서 ‘도시경관형성의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정비국’내에서 대부분의 경관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도시정비국’내에 따로 ‘도시경관실’을 두고 경관디자인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다.

- 도시정비국 및 도시경관실의 주요사업

도시정비국에서는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 시가지 재개발, 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업 등을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다.

도시경관실은 계획계, 추진계, 옥외광고물계를 두고 도시경관, 도시경관 심의회, 옥외 광고물의 규제에 관한 기획 입안, 옥외광고물 심의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표13) 후쿠오카시 도시디자인실 조직도

- 후쿠오카의 도시경관 조례 운용

경관 행정에는 규제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주적인 활동 행위의 유도를 중요시하여 기존의 제도나 수법으로는 규제가 어려운 지구 전체의 경관 형성을 중점적으로 활용한다. 도시경관 형성지구와 대규모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한 조언, 지도에 의한 유도 및 표창 조성 등 지원을 하며 운용한다.

(2) 요코하마시

이국적이며 개성있는 항구도시 요코하마는 1965년부터 도시 재정비가 본격화되면서 인간미 넘치는 거리의 정체성을 창출하는 도시디자인 행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경관 행정을 시작하였다.

녹지와 강변의 보전, 역사적인 자산을 살린 새로운 도시의 재생, 휴식공간을 지닌 활기 있는 상업지의 디자인, 바다와 시민이 만날 수 있는 해변의 창출, 새로운 주택지의 거리경관 정비 등 요코하마시 각 지구의 특성이 담긴 독자적인 공간의 매력을 갖추는데 주력하고 있다.

도시와 공원 등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등은 모두 동일한 지역적 목표에 따라 디자인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도시공간 디자인을 지향해 기획하고 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요코하마 도시디자인 행정의 주요 특징이다.

• 도시디자인의 목표

요코하마시의 도시디자인은 도시의 재생과 보존이라는 기능성과 경제성, 아름다움, 즐거움, 윤기 넘치는 도시의 미적·인간적 가치 등을 서로 조화시켜 특징있는 도시 공간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도시디자인 행정의 특징

- ① 마스터플랜이나 조례가 아닌 지도를 통해 협의를 유도
- ② 도심에서 주변으로,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어지는 점진적 진행
- ③ 도시디자인 담당공무원의 장기근무와 민간 신뢰를 기초
- ④ 가로조성사업 중심의 도시디자인 활동
- ⑤ 도시디자인 사전지도지구 제도의 운영

• 도시디자인 업무부서 및 역할

요코하마시는 1971년 도시의 재생과 정비를 담당하는 도시계획국 도시기획부 내에 도시디자인 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도시디자인실을 설치하여 공공사업부서와 민간사업부서와 협력하면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도시디자인실은 건축직, 조경직, 사무직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자인 기획 및 조정, 보행자 광장, 열린 광장 확보 및 거리조성 역할을 맡고 도로과, 건축과 등 관련부서와 협조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도시디자인실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기획적 도시디자인 : 도시 재생과 정비사업의 기획·입안
- ② 조정적 도시디자인 : 거리 만들기 사업에 관계자들의 의견을 참고해 지역의 특징이 있는 공간디자인 추진
- ③ 유도적 도시디자인 : 거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규칙 확립과 활용 도모
- ④ 디자인 개발 : 공공시설의 디자인을 개발
- ⑤ 도시디자인 조사·연구 : 도시디자인조사, 연구, PR

(3) 고베시

고베시는 경관형성이 일찍 이루어진 경관선진도시에 속하며, 1978년 도시경관 조례 제정, 1982년 도시경관형성기본계획을 책정하였다. /1990년 조례개정

• 경관형성 방침 : **지키기 (保全)** **키우기 (育成)** **만들기 (創造)**

• 고베다운 도시경관이 형성되는 지역의 지정

- ① 경관형성지역의 지정, 경관형성지정 건축물 등 제출(신고)제도
시민의 자주적인 경관만들기 협력에 지원
- ② 경관형성시민단체, 경관형성시민협정 인정
- ③ 활동비의 일부 보조, 전문가 파견
- ④ 경관형성에 대한 조성, 기술적 원조

• 고베시 경관형성 조례의 특징

- 시민, 사업자 및 전문가의 책무 명시 (제1장 제7조~제9조)
- 시민, 사업자 및 전문가의 의무로 도시경관형성의 협력과 배려에 관한 사항
- 신고 및 조언, 지도 등 적극적인 제도 (제2장 도시경관 형성 등 제 10조~15조, 제9장 잡칙 37조, 10장 벌칙 38조~40조)
- 경관형성방침 및 경관형성기준 및 지역내 행위제한 및 신고
- 경관형성 방침을 준수하며 방침에 미 적합시 조언 및 지도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 또는 교육위원 회칙 제정
- 규정위배자 및 허위신고자의 벌칙(벌금형)
- 시민단체등의 참여 시민 협정(제6장)
- 친밀한 도시 경관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민단체 등을 경관형성
- 시민단체로 지정
- 도시 경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구역내 토지, 건축물, 광고물등의 소유자 등과 경관 협정 체결

(4) 교토시

헤이안시대(平安時代) 수도로서 당나라 장안을 본따 1/3 규모로 조성되었다.

(동서 약 4.5km, 남북 약 5.2km, 기본 그리드 120m *120m)

- 1930년 풍치지구의 지정
- 1967년 고도보전법에 의한 역사적풍토특별보존지구의 지정(117ha)
- 1972년 시가지경관조례의 지정(전국을 선도)
- 1973년 시가지의 절반이 고도지구 지정(중심부의 높이 45m 제한)
- 1995년 시가지경관정비조례 제정, 2004년 경관법 모태
- 1996년 경관규제구역의 확대 · 옥외광고물 대책의 강화
- 2003년 직주공존지구의 3점 세트 도입

도시계획구역을 시가화정비구역과 시가화 구역으로 구분

- 시가화구역내 고도지구 지정(10m, 15m, 20m, 31m, 45m 5단계)

• 경관제도의 지구 지정

① 자연 · 역사적경관

풍치지구 : 자연경관이나 녹지가 풍부한 주택지의 보전, 1930년 풍치지구 지정

역사적풍토특별보전지구 : 고도보전법에 의해 역사적건조물과 자연환경이 일체를 이루는 고도의 역사적풍토 보존 · 근교녹지보전구역, 근교녹지특별보전지구, 특별녹지보전지구, 자연풍경보전지구(교토만)

② 시가지경관

미관지구, 건조물수경지구(교토만) : 1996년 시가지경관정비조례를 제정(시가지 경관조례를 전면 개정), 대처를 대폭 충실

미관지관의 건축물의 신축 : 인정제, 건조물 수경지구 계출(신고)제

③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

시가지경관조례에 의거한 특별수경보전지구를 참고하여, 1975년에 문화재보호법을 개정,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제도 창설(건축물 신축 : 허가제)

④ 역사적경관보전수경지구(교토만), 인근경관정비지구

상세한 경관을 정하여, 변경, 세세한 규제·유도, 연도경관형성지구
경관중요건조물의 지정(단체정비/역사적경관재생사업)

⑤ 교쵸우카(京町家)와 같이 역사적인 건조물 등 교토다운 정취가 있는 경관을 보전·재생하기위해 경관중요건조물 지정(2007년 4월 현재, 20건 지정)

⑥ 경관중요건축물의 외관수리시 보조

⑦ 경관중요건축물을 지역의 중심점으로하여 점·선·면 역사적 경관을 재생

• 옥외 광고물의 규제

○ 1996년에 ‘옥외광고물등에관한조례’를 제정(구 옥외광고물조례 전면개정), 대처에 대폭 충실

○ 옥외광고물금지구역 : 중요문화재등이 펼쳐진 장소, 사적명승천연기념물으로 지정받은 곳, 보안림, 하천, 도시공원 등의 장소에 옥외광고물의 표시, 게시물건의 설치를 금지

○ 옥외광고물규제구역

○ 연도형옥외광고물규제지역

옥외광고물등의 제한 필요가 있는 구획을 종별(1~5종)로 간판의 표시면적이나 최고높이와 같은 기준을 정하여 규제 / 허가제, 유효기간 5년

○ 옥외광고물등특별규제지구

○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등의 장소에 지역의 특성과 관련 제한 (계획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표시·게출물건의 설치 금지, 허가) / 유효기간 3년

○ 차량광고에따른 규제 / 2003년 3월 조례개정

○ 철도, 노선버스, 정기관광버스 등의 노선이 시내인 차체의 광고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규제 / 허가제, 유효기간 3년

• 교토시 경관형성 조례의 특징

-시민, 사업자의 책무 명시(제1장 5조)

-시민, 사업자 및 전문가의 의무로 도시경관형성의 협력과 배려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제 8장 43조~46조)

일정 규모내 토지 소유자등이, 해당 구역 내에 시가지 경관의 정비를 주된 목적으로 구역 내 건조물의 위치, 규모, 형태, 디자인에 관한 기준의 협정체결

-강력 제제 (제10장 벌칙 58조~61조)

-규정위반에 대한 벌칙(벌금형)

4. 시사점

(1) 지방자치단체의 주도

일본의 경관 운용 실태 중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국가의 법제로는 보호되기 어려운 경관을 지켜나가기 위해 오랜 기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례를 제정하여 대처하였고, 이러한 노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이 제정된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제도운영의 유연성

도시계획 틀에서 도시라는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그 대상을 농촌·자연공원 범위로 확장하여 다루고 있으며, 매우 광범위한 구역별 규제 대상과 내용을 세분화함으로써 일률적인 규제를 피하고 전체적인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지구별 규제의 강도나 허가 절차 등도 대상에 따라 차등화 하여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3)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전문화

일본의 경관 사업 운영은 사업의 주체인 중앙정부, 지자체, 사업자, 주민 등 4자가 각기 책임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행정 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주민의 의견 수렴이 제도화 되어 있으며, 외곽 협력기구를 구성해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업 진행이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전문 조직 구성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도시경관행정 주관부서로서 도시경관과 또는 도시디자인실을 기획조정부나 도시계획국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조직은 구체적인 사업의 운영보다는 민간과 공공간의 중재와 조정, 그리고 행정 부서간의 조정협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도시경관행정을 지원한다.

이러한 조직의 운영은 주로 시장 직속기구성격 또는 기획조정국, 예산관련부서, 실무 도시계획국 등과 연계되어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4) 행정 인력의 전문화

요코하마 도시경관 관련전문가의 경우처럼 한 직종에서 10~20년간 근무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경험을 축적, 전문화 되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역할 분담

중앙정부는 경관정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고 시행하는 동시에 세제 재정의 지원을 한다. 또한 국민들의 경관의 기본 이념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계발 및 지식보급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구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부합하는 시책의 책정 및 시행 등 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2. 유럽의 공공디자인 정책 사례⁽⁹⁾

유럽 국가에서는 오랜 전통과 역사성이 제도, 문화와 생활에 담겨 있으며 도시계획·경관·문화유산·공공예술 등 각 분야별로 마련된 법 규정을 토대로 수준 높고 엄격한 디자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공공디자인이라는 정의된 영역이나 이와 직접 관련된 행정 조직이나 법, 제도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유럽 국가의 디자인 정책의 근간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 (Design for All)으로 축약되는 보편성, 조화와 배려가 담긴 사람 중심을 추구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국가 차원으로 논의되고 있다.

유럽 국가에서는 국가지도자를 위시한 국민들이 공공디자인을 포함한 디자인을 주요한 미래 경쟁력 수단으로 이미 인식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도자와 국민, 전문가들이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접근과 실행을 하고 있다.

1. 영국

영국은 근대 산업혁명의 근원지이며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유럽 지역에 전파한 디자인 종주국으로서 국가 차원의 디자인 진흥에 있어 선도적인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디자인 경쟁력의 원동력은 무엇보다 미래를 예측하는 정부의 앞선 정책과 전략을 들 수 있으며, 우리의 디자인진흥원에 해당하는 디자인 카운슬(Design Council)을 통하여 정부 주도의 디자인 진흥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1) 디자인 관련 기관 및 기구

- 디자인 카운슬(UK Design Council)
- ① 1915년 디자인산업협회(DIA, Design and Industries Association)를 설립하여 국가차원의 디자인 진흥 전략을 수립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 ② 1970년 디자인 카운슬(UK Design Council)설립하여 산업 디자인,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차량 디자인 등 민간사업 부문 외에 건물 디자인, 안내정보디자인 등 공공디자인 분야의 전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③ 1994년 디자인 솔루션 제공 및 디자인 캠페인 R&D 등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벗어나 자문 제공, 영향력 행사, 로비활동 등 차원 높은 역할로 기능과 구조로 개편되었다.
- * 지역 디자인 카운실 지점 철수, 지역의 디자인 정책은 지역정부기관(지자체)에서 수행 (디자인 자문 서비스기관, 지역산업 발전기구)

(9)박찬숙 외, 유럽의 도시 공공디자인을 읽다, 2007. 10, 237~ 인용하여 재 정리 하였음.

- 건축 및 공간환경자문위원회(CABE/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¹⁰⁾
건축가, 도시설계사, 토목공학자, 공공디자이너 및 개발업자들로 구성된 도시의 건축, 도시계획과 디자인, 공공장소 등 정부의 건축 프로젝트의 자문 담당기관으로, 대형 공공건물, 건물 단지, 주요 기반 시설 및 공원 등 위치와 경관 주변 환경이 중요한 대상의 디자인 심사가 주요 기능이다.
- * 스페이스셰이퍼(Spaceshaper) : CABE의 공공디자인 점검 기구로 적절치 못한 디자인에 과도한 자본과 시간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와 일반인이 디자인 준비 단계에 참여하게 한다.
- * 디자인 챔피언 : 지역 또는 회사별 디자인 챔피언을 정하여 좋은 디자인이 반영되도록 내부 의사 소통,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을 제공한다.
- 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정부가 직접 디자인 정책에서 사업 자체에 개입하기 보다는 사업 구조 형성에 기여, 디자인정책의 현실적 필요사항을 잘 알고 있는 BDI, DBA, CSD 등 민간단체의 활동을 측면 지원한다.

(2) 디자인 관련 정책

- 디자인 수출 지원제도
1999년 무역투자청은 민간 디자인 단체 · 디자인 전문회사 · 기업 · 정부간 의견 조정 및 정부 프로젝트 수행, 디자인분야 수출지원 민간 기구를 설립하였다.
지원사업 내용은
① 각국 주재 대사관 및 문화원과 협력하여 디자인 관련 전시 및 세미나 개최,
② 해외 전시지원, 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조사단 파견,
③ 디자인 관련 정부지원정책 가이드북, 디자이너를 위한 창업 가이드북 등의 발간으로 세계 디자인 중추국이자 최대 디자인 수출국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 * 디자인 해외 매출 약 1조 4625억 원/2006년
- 창조산업과 디자인 정책
토니 블레어 정부는 영국의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이라고 인식, 광고, 건설, 패션 영화, 소프트웨어, 음반, 공연 등을 포함하는 창조산업 실태조사 및 육성정책을 수립 하였다.
- 창조적인 영국(Creative Britain) 캠페인 전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보조금을 지급하던 정부의 역할을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촉매 기능으로 전환하여 기업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시장 정보 제공, 외부 위협에서 보호 역할이 제기되었다.

(10)BDI/Brish Design initiative, DBA/Design Business Association, CSD/Chartred Society of Designers

- 도시재생과 창조산업, 공공디자인

1998년 ‘도시 르네상스를 향한 테스크’ 를 통하여 도심의 쇠퇴한 마을과 소도시의 개선과 함께 사회적으로 융화된 우수 디자인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었는데 건물과 공공장소의 높은 수준의 디자인 추구가 첫 번째 의제로 거론 되었다.

- 2004년 ‘Planning and Compulsory Purchase Act’ 제정

기존의 토지이용 계획체계에서 공공디자인을 포함한 건축 및 공간 설계의 국가 계획정책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방자치부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 설계정책성명서(PPS12)를 제시하였고, 2006년에는 이를 대체하는 설계정책가이드(PPG)가 제시 되었다.

이 중 공공디자인과 관련 있는 PPS는 ‘PPS3: 주거(Housing)’ 내에 부가된 지침으로 교통, 주거배치, 주차 등 ‘디자인에 의해 더 나은 생활 장소’ 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 계획의 디자인에 관한 지침으로는 ‘디자인에 의한 더 나은 실행을 위한 도시디자인 계획 시스템’ 이 제공되고 있다.

- 도시재생사업

건축가와 도시계획자들은 기존의 재개발(Redvelopment) 방식 대신 도시 구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도시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도시재생(Regeneration)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영국왕립건축가협회(RIBA)의 건축가들은 ‘지속가능한 개발’, 즉 ‘미래에 개발할 여지를 남긴 채 천천히 개발하는 것’ 으로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며 전통과 첨단을 이어가는 미래 지향적인 영국 디자인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 도시 및 지방계획에 관한 조례(Town and planning Act 1990)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인 관할 구(District Council) 및 도(County Council)로 책임 권한 등을 이양 하였다.

* 재정확보는 부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되 지방정부 자체 지방세로 충당

2. 프랑스

프랑스의 디자인은 예술과 기술의 창조적인 접목을 통한 고품격 문화 이미지를 창출해내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 실내 장식용품, 직물, 의류, 화장품 등 장식적이며 고급스러운 프랑스 만의 독보적인 디자인 영역을 확보하여 ‘예술적 디자인의 중심지 프랑스’ 라는 고유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1981년 지방분권화법에 따른 실질적인 집행이 시작되면서 각 지방정부들은 정치, 재정, 예산, 교육, 문화, 산업, 국제적 활동 등 많은 부분에서 중앙정부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자치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디자인 정책에서도 이러한 지방 분권화의 흐름에 따라 중앙 정부의 산하 조직이 아닌 각 지역의 디자인센터가 연합하여 형성된 주정부의 디자인센터를 이루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디자인센터에서는 디자인 진흥 및 정책 수립을 주로 담당하며 센터의 운영은 지역 지방정부의 후원에 의존한다.

(1) 디자인 관련 기관 및 기구

프랑스의 디자인 정책 및 사업은 여러 부처에서 다원화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우리의 문화관광체육부와 지식경제부에 해당하는 문화통신부와 산업부에서 비중있게 담당하고 있다.

- 문화통신부

신진 디자이너 지원 등 창작활동의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각 지역과 연계하여 가로 조형물, 공간 및 환경에 대한 디자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 조형예술진흥청 : 디자인 진흥을 위한 활동을 조직화 · 규정 · 중재하는 산하 기구

- 산업부

중소기업 및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 분야의 디자인 진흥정책을 시행한다.

- 프랑스산업디자인진흥청(APCI, Agence pour la promotion de la creation industrille)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디자인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과 진흥 과정의 지원 · 전략을 추진하는 기구로서 1983년 문화통신부 산하로 설치되었다가, 1993년 비영리 민간독립기구로 성격이 전환되었다.

*1999년 우수디자인선정제도인 ‘옵세르바퇴르 뒤 디자인(Observateur du Design)상’ 을 제정해 매년 시행(공모작 중 150점에 라벨 부여, 특별 우수작에 스타 수여)

- 경제재무산업부

재정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디자인 수요 촉진을 목표로 조직 및 산하 기관에서, 소비재 혁신을 위한 디자인 관련업무 지원, 디자인 프로젝트 재정 지원, 디자인 전시 및 작품 제작 지원, 지역 디자인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 교통 · 시설 · 관광 · 해양부

도(道) 시설국(DDE) 및 레지옹(Region) 시설국(DDE)에서 공개매수청약을 통하여 공공디자인 관련 발주사업의 계약을 담당한다.

* 프랑스의 공공사업 시장 규모는 1,200억 유로/연

- 건축문화재국

1998년 문화통신부 소속의 문화재국과 시설부 소속이었던 건축국을 통합하여 새롭게 구성된 조직으로 도시 건축물과 도시경관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축적 창조를 촉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지방건축문화유산부(SDAP)

광역지자체 단위인 데파르트망(Department)에 설치되어 국가 문화유산의 보호 보존하는 정책을 실행하며 건축물과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의 개발계획 심의, 유산 및 유적의 보호,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고 있다.

중앙정부 소속의 관리가 과전되며 문화통신부 중앙행정업무실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소통을 원활하게 해 준다.

중앙에서 지역관련 정책 및 사업의 조정 및 총괄 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 공공건축물 추진단(MIQCP)

1977년 신설된 문화통신부 소속의 조직으로 공공건축물의 건축 품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며, SDAP과 유사한 성격을 띤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축물의 유지 관리, 인프라 및 공공장소의 신개축 시 자문, 건축전문가를 통한 공공건축물의 품질 도모, 건축개선정책의 입안 및 집행, 건축 관련 입법, 홍보전략 수립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 파리지 가로시설물위원회(Street Furniture Committee, Paris)

파리지의 가로시설물 정책 만을 전담하는 시장 직속의 위원회로 위원장(파리 시장), 문화통신부 소속 파견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파리지의 공공관련 시설, 공간, 색채, 광고 등의 총괄기본지침과 사기업 소관인 공중전화, 우체통, 대민 서비스 시설, 관광시설 등에 대한 기본지침을 의결 · 심의 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육교 · 교량 등의 공공성 토목시설물과 공공성 격의 건축물에 대한 주변과의 조화, 층고 높이 제한, 공공시설물 현황, 안전성 등을 고려해 심의 · 의결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2) 디자인 관련 규제

• 문화재 보호 규제

‘역사적 모뉴먼트법(sur les monuments historiques)’에 의해 파리 시내와 베르사이유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건축물 층고가 6층 높이로 제한되고 있는 등 프랑스 거리의 대부분 건물들은 ‘입면보존지역’에 해당되어 문화재법 상 리노베이션 규제가 적용, 사유건물이라도 외관 개조가 불가능하다.

규제 사항은 창문 변경, 외부 도색, 중요 도로변 건축물의 파사드 재료 변경, 발코니 · 고풍스런 창호의 철거 · 개조 금지, 석조 · 콘크리트 · 시멘트 표면에 도색이 해당된다. 재건축 허가를 받더라도 인접 건물과의 입면적 연속성과 조화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내부의 개조는 상대적으로 유연함)

• 광고물관리법 및 주요 규제 내용

1979년 12월 파리지 옥외광고물 관리법령이 제정되었다. 광고물 관리는 파리지 도시정비부에서 담당하며 광고물, 간판, 유도간판 등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서 보이는 것이 적용대상이다.

파리시는 지역 특성에 따라 광고구역을 ①광고 금지구역, ②일반규칙구역, ③확대광고 1, 2구역, ④제한광고 1, 2구역, ⑤세느강변과 운하지역의 제한지역으로 구분하여 상업활동에서 문화재를 보호하게 한다.

광고 구역에 따라 광고물과 간판의 설치위치, 수, 면적, 크기 등을 차등 적용하며, 주요 규제 내용은 지상에서의 최대 높이와 최대 면적, 절대 높이를 제한하며, 구역에 따라 비조명광고, 조명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제한한다.

별도 색상규제 규정은 없으나 경관상 적합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3. 독일

독일 디자인의 특징은 고도의 합리주의와 기능주의에 의거한 매우 실용적이고 견고한 면을 보여준다. 디자인을 외관을 꾸미는 단계를 넘어서 환경과 도시 등 사회적이고 체계를 갖춘 총체적인 활동이자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독일은 지방 분권 시스템이 잘 이루어진 연방국가 체제로 디자인 정책 역시 중앙 정부 차원의 디자인 정책이나 담당 부서를 운용하는 대신 13개 지역별로 운영 중인 ‘디자인센터’ 등이 지역 고유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 차별적인 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디자인센터들의 업무에 대한 정보와 연구를 담당하는 연방 중앙기구인 ‘독일디자인협의회’(German Design Council)를 두어 디자인 진흥을 담당하되 각 디자인센터를 총괄하지는 않는다.

- 디자인 관련 정책 기관 및 법률

도시계획 관점에서 만들어진 연방차원의 건설계획법과 지역적 특색에 맞는 각 연방주마다의 건축법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건설계획법(Bauplanungsrecht) : 연방건설법전과 건축이용령이 기본법령으로 연방건설법전은 도시관련 전분야를 다루며 건물의 외관에 관한 규정을 둔다.

이를 토대로 각 연방주에서는 건설 기준계획(Bauleitplanung)을 수립 운영하며, 연방 소속 도시와 자치구도 건설기준계획을 수립해 각 주의 특성에 맞게 토지 이용계획과 건축의 상세계획을 세운다.

건설계획법에 따라 계획된 프로젝트에 대하여 주 차원에서 지역 동의를 얻어 진행의 가부와 무엇을 건축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건설계획 수립절차에서 자치구별 도시설계 건설계획의 수립절차에서 지역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절차적 사전참가의 장을 마련해 놓고 있다.

- 건축법(LOB, Landesbauordnung)

건축시행자와 건축담당당국의 과제가 규정, 건축 시설물 설치에 적용되는 절차를 위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건축규제법(Bauordnungsrecht) : 연방건축법전에 근거하여 각 연방주의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험방지, 환경보호, 사회적 이해, 형태 등의 관점으로 지붕 형태, 창문형태, 건축자재, 건물 색상, 담장 등 개별적인 건축물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또한 건축규제법은 부동산과 그의 건축에 대한 거리적, 교통발달적 측면의 요건, 개별적인 주변장소들, 주거지와 주차장 등의 특별 건물들, 건축구조물과 그에 따른 안전지대, 교통안전, 화재예방 등 중요한 부수적 문제에 대한 기본법적인 요구에 중점을 둔다.

- 사업 전 계획 평가 절차(Planfeststellungsverfahren)

모든 건설이나 개발 행위에 앞서 기존의 지역 개발 계획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새로운 개발 계획을 평가하는 절차이다. 개발과 연관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며 건설 또는 개발 행위로 인해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룬다.

이 절차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치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근거로 제시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 여부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결정을 하게된다. 결과적으로 개발에 따른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며 사회적 갈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보게 된다.

4. 시사점

(1) 디자인 정책의 지방 분권

영국은 지역의 디자인 정책을 각 지역 정부기관이 담당하도록 하여 디자인 자문 서비스 기관이나 지역산업 발전기구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법규에 있어서도 도시 및 지방계획에 관한 조례를 통해 도시 설계 및 디자인에 관한 책임 권한을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고 있다.

프랑스는 1981년 부터 지방분권화법에 따라 지방자치가 이루어졌으며 디자인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지역 분권적인 지역밀착형 디자인 정책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디자인 진흥을 수행하는 디자인센터를 보더라도 일본의 경관법 제정 과정과 유사하게 각 지역의 디자인센터가 먼저 형성되고 이 디자인센터가 모여져서 중앙 연합 차원의 프랑스 디자인센터로 형성되고 있다. 각 지방의 디자인센터는 지역 지방정부의 후원을 받으며 지역밀착형 디자인 정책을 펼쳐 나간다.

독일도 다양성을 선호하며 지방 분권화된 정치 체계에서 범 국가적으로 디자인 정책을 관장하지 않고, 13개 각 지역별로 운영 중인 지역 디자인센터들이 지역 고유의 역사, 제도, 재정구조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디자인 진흥 정책을 펼치고 있다.

(2) 분화된 디자인 기능 문화

디자인 관련 기구의 통합을 일관되게 외치는 우리에게만 생소하겠지만 프랑스의 디자인 정책은 문화통신부와 산업부로 이원화 됐으며 건축문화재국, 경제재무국 등 다른 부처에서도 도시 건축물 및 중소기업 디자인 수요 촉진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어떻게 보면 몇몇 기관들이 동일한 영역 내에서 경쟁하는 것 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활동을 다원화함으로써 과잉 디자인을 억제하고 (The poor is the better) 신중한 설치 및 개발 계획을 이끌어 공공디자인이 추구하는대로 '나만의 주장이 아닌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함' 을 실천하고 있다.

(3) 국가 차원의 영국 디자인 정책

디자인 중주국 영국의 명성은 국가 전체의 역량의 결집이지만 그 중 국가 지도자의 미래에 전략 산업으로 가치를 인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영국은 과거에서 미래에 이르기까지 탄탄한 디자인 기반을 갖추고 있다. 대처 전 수상 및 블레어, 고든 총리 모두 디자인을 창조산업으로 인식하고 국가 경쟁력 육성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디자인 정책을 펴나가면서 정부는 사업 구조 형성 단계에만 기여하고 그 자체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디자인 정책의 현실적 필요성을 잘 알고 운용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제 3장 국내 공공디자인 현황

1. 중앙 정부의 조직과 법규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처 및 기관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실행을 담당하는 중앙 부처로는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외에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도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 부처에 집중되지 않고 다원화된 운영 형태는 프랑스의 사례에서와 같은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공디자인 주도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가 큰 축을 이룬다.

(1) 지식경제부

프랑스의 산업부와 유사한 성격인 지식경제부의 성장동력실 ‘디자인브랜드’ 과에서 디자인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데 디자인 정책 총괄, 디자인코리아 추진, 지역디자인 정책 및 전문 인력 양성을 담당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디자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은 한국포장디자인센터로 출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확대되어 산업분야의 디자인 정책 개발과 지역 디자인 혁신 거점 추진,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등을 통한 디자인 역량 강화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였다.

공공디자인 영역으로의 확장을 위해 기관 명칭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개칭하며 공공디자인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개발지원 사업 기능이 2009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능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디자인 인력 양성사업	디자인인력양성사업 실무 디자이너 재교육 사업 '차세대디자인리더' 육성사업
지역디자인 혁신기반 확충·개편	지역디자인 혁신사업 추진 지역디자인센터(RDC)건립 및 거점 기구화 지역디자인 혁신주체(DIC, RDC) 활용도 제고
디자인기술개발 사업	디자인혁신기술개발사업 세계일류상품디자인·브랜드 개발사업 디자인기반기술개발사업 디자인소재·표면처리기술개발사업
포장기술혁신사업	디자인혁신기술개발사업
공공디자인사업	공공디자인개발사업(국가형, 지역형) 공공디자인 지역 컨설팅사업

(표14)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주요 기능

디자인 진흥원의 공공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국가형 내용은 다음과 같이 독창성 있는 신규 사업의 발굴 보다는 중앙 부처의 디자인 관련 개발 사업 제안에 대한 지원금 배분 기능의 성격이 짙다.

실행부처	사업명(사업내용)	실행예산
건설교통부	도로명 중심의 도로안내표지판 디자인 개발	정부 50억
농림부	농촌마을 경관형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마을 요소 디자인 개발	4,100억
행정안전부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사업 간판디자인 개발	지자체 당 2~3억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사업간판디자인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2억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지역 공공디자인 개발	150억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디자인 개발	104억
행복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 지하차도 벽면 디자인 개발	5억
산림청	산촌생태마을 공공디자인 개발	5억4천만(18개 마을)
	등산로 안내시스템 디자인 개발	47억 9300만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BI 디자인 개발	미편성
	어업지도선 상징매체(부착 표식) 디자인 개발	미편성
환경부	멸종위기 종복원사업 대표 캐릭터 개발	3억
	밀렵·밀거래 방지 대표 캐릭터 개발	3억
기상청	'07년 지진관측소 표준 디자인 개발	5억6천만
교육인적자원부	환경친화형 학교시설물 BI 디자인 개발	3,500만
	한국재활복지대학 환경디자인 개발	5억
문화재청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BI 및 캐릭터 개발	9억
	세계유산 등 주요 기념지 공공디자인 개발	9억
청와대	차세대 과학교과서(중1, 초3·4학년) 디자인 개발	6억

(표15) 2007년 디자인진흥원의 국가형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실행부처	사업명(사업내용)	실행예산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기획단경제자유구역 Visual Identity 개발사업	1억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공공디자인용 표준색 견본 개발보급	1억 5천만
행정안전부	공공안내 및 안전표지(픽토그램)국가표준 개발	1억 5천만
	아름다운간판시범거리사업 간판디자인 지원	5억,
	공공자전거시스템 디자인 표준안 개발	1억 5천만
	편의성 제고를 위한 행정서식 리뉴얼 디자인 연구	1억 3천만
경찰청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디자인 표준안 개발	1억 5천만
공군본부	공군상징체계를 활용한 환경디자인 표준가이드라인 개발	1억
문화재청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지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1억 5천만
	궁궐 관람객 지원 편의시설물 디자인 개발	1억 5천만
산림청	등산문화 개선운동 BI, 캐릭터 개발 및 등산로 지도 디자인 개발	1억 2천5백만
국토해양부	도로안내표지판 전용서체 장체 개발	7천만
농림수산식품부	농촌마을 경관형성을 위한 주요시설물 디자인 및 시각모델 구축	1억 5천만
환경부	지하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생태 경관지침 및 모델 개발	2억
마산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1억 5천만
우정사업본부	EMS로고를 활용한 우체국 국제특송 디자인브랜드 개발	1억
한국토지공사	도심중심가로 입체토지 형상 및 부속시설 디자인사업	7억원 (5억 부담)
한국관광공사	FIT(개별외래관광객)을 위한 관광안내표지판 표준 디자인 개발	2억원 (1억 부담)
한국수자원공사	사이버 물 박물관 구축	5억 4천만(4천 부담)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중심가로 환경개선 시범사업	1억 5천만(7천만 부담)
중소기업청	재래시장활성화공공디자인개발	10억,
교육과학기술부	차세대 과학교과서(중2/초5,6년)디자인 개발	5억, (2억 부담)

(표16) 2008년 디자인진흥원의 국가형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근거로 디자인 자체를 문화적 현상이자 문화상품이며, 대표적인 소프트산업인 창조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디자인 정책이 지식경제부 소관이 아닌 문광부가 주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2006년에는 여야의원 33인 명의로 박찬숙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디자인에 관한법률안’이 국회 문광위에 상정되기도 하는 등 지식경제부와외의 첨예한 경쟁 속에 공공디자인 부문에 있어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앙부처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현재 문화예술국 소속 예술정책관, ‘디자인공간문화과’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 도시와 농촌지역의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 간판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 * 문화도시의 공간환경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 *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문화적 개선에 관한 사항
- *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 * 공간문화 인식 제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 국·공립시설의 공간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공예 진흥에 관한 사항
- * 한국공예문화진흥원 및 한국디자인재단과 관련된 업무

(표17) 문광부의 공공디자인 관련 기능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공공디자인 정책과는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낙후지역 지원, 도서종합개발사업, 소도시육성등의 지역활성화 정책 사업들이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 부처이다.

정책 주관은 지역발전정책국의 지역발전과와 지역녹색성장과에서 담당한다.

- * 낙후지역 등 지원 및 정책 개발·연구
- *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수립 및 연차별 계획 수립
- * 접경지역지원 종합개발계획 및 연차별계획 수립·지원
- * 지방소도읍 관련 사업
- * 농어촌도로정비법 및 농어촌도로 관련
- * 광역시도·시도·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 관련
- *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 * 도심 생활여건 개선 지원
- * 노후불량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
- *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계획 수립·추진
-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관련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의 운용 관련
- * 공중화장실 관련

(표18) 행안부의 공공디자인 관련 기능

(4)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에서는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는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산하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건축기획과, 건축문화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하기로 한 도시건축설계 및 디자인 혁신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 * U-City 건설을 위한 정책, 제도 및 사업
- * U-Eco City R&D사업 등에 관한 지원
- * 도시재생정책 및 도시재생 R&D 사업 관리
-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 *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 시범도시 지원사업,
- *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건축분야)
- *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정책(에너지절약기준, 친환경건축물인증 등)
-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디자인 정책 총괄
- * 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및 개선 대책/건축문화 정책 개발
- * 건축·도시 디자인산업 육성
- * 국가상징거리조성
- * 수변도시비전공모, 국토환경디자인 업무지원
- * 건축(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표19) 국해부의 공공디자인 관련 기능

(5) 시사점

공공디자인이 추구하는 기본 방향이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고속 개발이 아닌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신중한 정책 결정과 고품격의 개발 성과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의사 결정이 신속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단일화 된 주관 부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본다.

이런 기조는 경관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이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을 말함).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디자인 정책을 주관하며 공공디자인 영역으로 확장하려던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개발업무인 공공디자인개발사업, 공공디자인컨설팅사업을 포함한 디자인기반기술개발사업 등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등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역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단독으로 주도할 것인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나 또 다른 디자인센터 기능의 기관을 설립할지의 결정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 부처의 사업 소관의 향방이 지자체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것은 광역을 포함한 기초지자체의 공공디자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충당의 대부분이 중앙 부처의 공모사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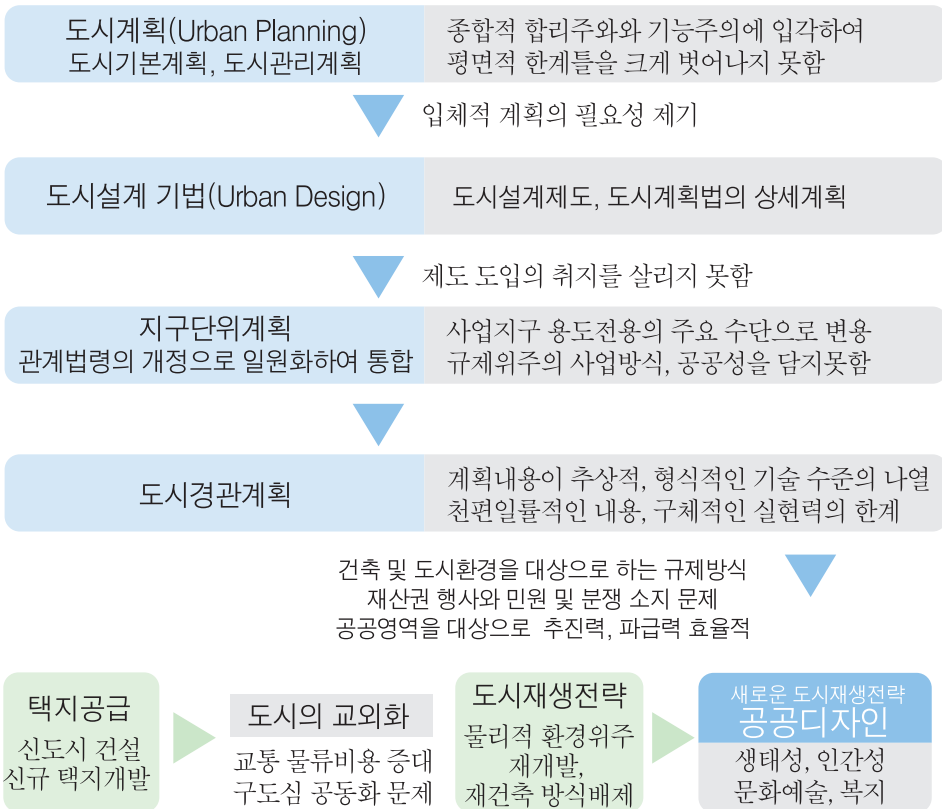
2.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의 관계⁽¹¹⁾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지자체의 법규로는 경관법을 근거로 하는 경관 조례와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으며 지역마다 제각기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공공디자인 조례의 경우 경관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근거법의 부재로 자주적 조례로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공공디자인 조례안의 내용이 도시경관조례나 도시디자인조례에 포함하여 운용될 수 있는 있음에도 기존의 경관 조례 외에 공공디자인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지자체도 있다. 원칙적으로 도시경관 관리방안이라는 큰 틀을 우선 마련하고 부분적이고 실행적 성격인 공공디자인으로 완결 짓는 절차가 바람직한 순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서둘러 공공디자인에 관심을 갖고 도입하는 배경에는 경관계획을 포함한 도시계획 및 설계 방식으로는 지역 특성을 구체화 하기에 부족하며 추상적이며 형식적인 수준의 낮은 실행력이라는 한계를 안고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 도입하여 활용한 그간의 도시계획 기법이 공공디자인 기법에 이르기까지의 변천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도시계획 유형의 변화

(11)정경석 외, 새로운 도시전략으로서의 공공디자인과 지자체의 역할 ('08, 7) p70, 내용을 축약 그림화 하였음.

3. 공공디자인 관련법

우리나라는 1991년 ‘자연환경보전법’ 이 처음 제정 된 후, (1997년 전문, 1999년 이후 부분 개정) 이 법을 근거로 자연경관조례제정이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졌다.

-경관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된 기초 지자체들의 자치 조례나 규정들을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용

2003년에 제정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도시기본계획내에 경관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면서부터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지자체들이 도시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도시경관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기시작하였다.

현재 공공디자인과 관련있는 법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물식품부, 문화관광체육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및 문화재청, 산림청, 소방방재청에 거쳐 제정되어 있으며 상호보완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해석 및 적용이 바람직 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 용도지구(미관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의 지정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의 지정 고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주거지역 세분화 및 건폐율, 용적률 제한
건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건축물 행위 제한과 각종 건축행위의 규제를 통한 건축물의 형태를 구체화 건축물의 밀도 및 규모(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건축선 후퇴, 대지안의 공지,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규제
자연환경보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경관의 체계적 보전 · 관리함을 목적 자연경관의 보전 및 자연훼손방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 및 방법, 게시시설의 설치·유지 규제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광고물 인허가 및 광고물 정비, 광고물 등 금지 또는 제한
도시공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지역내의 자연경관 보호를 목적 도시공원의 세분 : 어린이, 근린, 도시자연, 묘지, 체육 공원 녹지의 세분 : 완충녹지, 경관녹지
문화재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보호 및 보호구역의 지정
산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경관(녹지)의 보전
농어촌정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 시 농어촌 경관의 보존·조성 및 농어촌 관광휴양 지원시설의 정비 농어촌관광휴양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농어촌 및 준 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 보존 및 소득 증대
산지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지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의 구분 공익용 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자원보호·자연생태계 자연경관보존 · 국민보건휴양증진
하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 환경기능을 개선하고 복원하는 목적

(표20) 일본정령도시의 경관행정조직체계 예

주무부처	관 련 법
국토해양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하천법, 주택법, 건축법, 도로법, 연안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토지사용규제기본법, 도시개발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수산부	농어촌정비법, 농어촌기본법,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 농산어촌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문화관광부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보존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전산업발전법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촉진에관한 특별법, 접경지역지원법, 도서개발촉진법,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 농어촌도로정비법, 공중화장실등에관한 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자연공원법, 환경교육진흥법,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
문화재청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보호법
산림청	산림보호법, 산림기본법, 산지관리법,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소방방재청	소화전정비법

(표21) 정부 부처별 공공디자인 관련 법

• 공공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법규



- 공공(도시)디자인 조례
- 경관 조례



가로시설물

-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가로등 관리 규정
-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규정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 ### 휴양시설물
-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표지

- 소방표지 규정
- 시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 상수도관로 표지 설치 기준
- 건설공사 주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
- 도로점용료 징수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 ### 간판
- 동 주민센터 간판 규정
 - 동사무소 간판 규정



조경시설물

- 조경시설 관리 조례
- 조경 관리 조례 시행 규칙
- 조경 및 가로수 관리 조례
- 조경 수목 검사·검수 규정



- ### 유희 시설물
- 어린이 놀이터 관리 지침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옥외물 특별 정비 자금 용자 규칙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및 신고수리에 관한 규정



- ### 문화관광시설물
-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 등에 관한 규칙



상징물

- 상징물 조례
-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상징물 및 상표권에 관한 조례
- 이미지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림 2) 시설물 관련 법규

3. 시사점

일본의 경관법 제정 과정을 살펴보면 1960년대 지자체 스스로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시작한 경관 조례가 중앙 정부 차원으로 법률화 되기까지는 40 여년의 기간이 소요되고서 2004년에 이르러서야 제정되었다. 그 기간 동안 시행 착오와 갈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지자체에서 분명히 나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 준비 기간이 된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는 도시계획의 도입, 도시설계의 도입, 지구단위 계획에 이어 경관계획까지 단기간에 거쳐 도입됐으나 한가지 계획을 제대로 음미할 틈도 없이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고 있는 현실이다. 공공디자인도 마찬가지로 도입되는 시점에서 공공디자인이라는 신상품이 제 효용을 발하지 못하고 이내 다른 정책과 같은 전철을 밟게되는 우려가 앞서게 된다.

공공디자인을 추진하는 기본 태도인 신중한 사업 선택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주민 동의를 비롯한 커뮤니케이션의 향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과정이니 만큼 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1) 복수 조례의 운용

경관조례나 공공디자인조례, 도시디자인조례가 각 지자체마다 제각기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공공디자인 조례의 경우 경관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상황과 같이 근거법이 모호하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공공디자인 조례안의 내용이 도시경관조례나 도시디자인조례에 포함하여 운용될 수 있는 있음에도 기존의 경관 조례 외에 공공디자인 조례를 별도 제정하기도 한다.

도시경관관리방안의 마련 보다 공공디자인 방안이 먼저 수립되어 절차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조례의 분할에 앞서 각 조례나 운용방안의 위상을 정하여야 한다.

(2) 경관 조례와의 차별성

충청남도 경관 조례 제정을 전제한다면 경관 조례와 공공디자인 조례 사이의 관계성 및 차별성이 유지되기가 어렵다. 기존 공공디자인조례의 기본 골격이 경관법에서 명시한 사항을 이미 수록 했기 때문에 공공디자인 조례의 개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2. 국내 지자체 공공디자인 현황

세계디자인수도(WDC)를 표방하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경기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이 규모나 조직 구성 현황에서 단연 선두를 달리며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모델로 다른 지자체에 확산되고 있다.

1. 서울특별시

(1) 공공디자인 조직 운영

- 도시디자인 개념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운곽·색채·조명 및 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

- 자치법규 현황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06. 7.) :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명시

내용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시행계획,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08. 5.) : 경관법 시행('07.11.)에 따른 조례

내용 : 경관계획 수립, 경관사업 시행, 경관협정 인가 및 지원,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08. 9.)

서울디자인산업 진흥 사업 수행을 위한 설립과 운영

*경관조례와 도시디자인 조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 디자인 전략

비전 : SOFT SEOUL

디자인서울 4대 기본전략

- ① 비우는 디자인 서울(Airy) : 잘 읽히는 서울
- ② 통합디자인 서울 (Intergrated) : 효율적인 디자인
- ③ 더불어 디자인하는 서울(Collaborative) : 행복한 서울
- ④ 지속 가능한 디자인 서울 (Sustainable) : 건강한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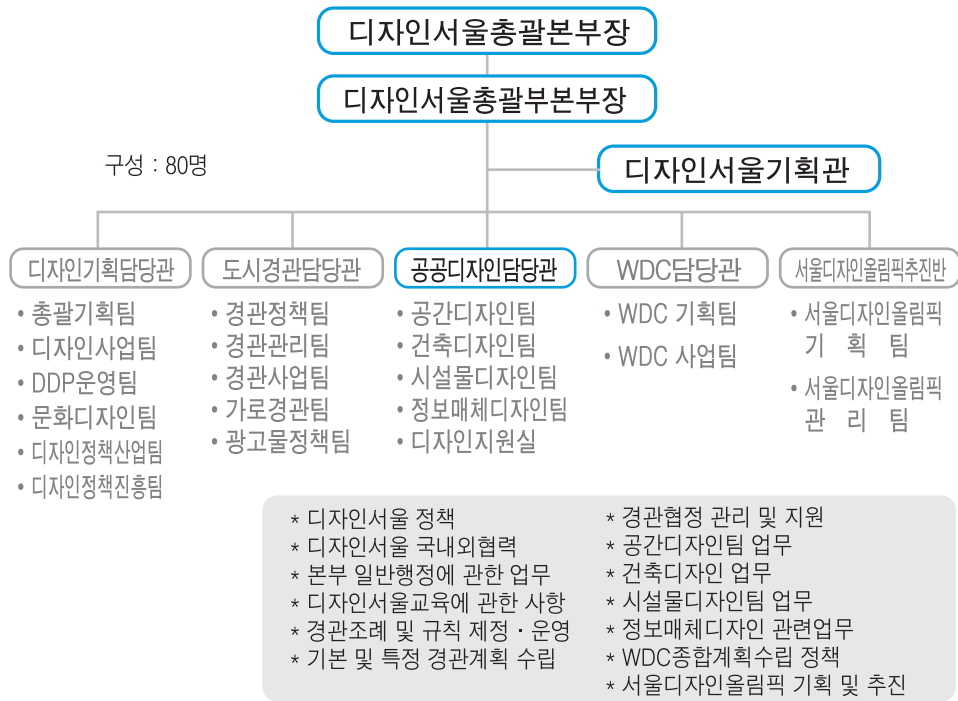
- 디자인 조직

디자인서울총괄본부('07. 5. 1. 구성/시장직속)

서울특별시는 2005년 1월 주택국 산하에 '도시디자인과'를 설치한것을 시작으로 부시장급의 총괄본부장을 비롯 부분부장, 기획관, 5명의 담당관, 18팀 110명 규모로 이루어졌다.

업무통합 : 디자인 관련 기존 업무 및 사업을 이관

- 세출규모 : 574억4천9백만원('08), 882억1천4백만원('09)



(표22) 서울시 공공디자인 조직

2) 서울디자인위원회

위원장 1명(시장), 공동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운영

* 필요한 경우, 5명 이상으로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심의·자문을 대리



(표23) 서울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조직

• 심의 대상

- ① 도시디자인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②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③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 ④ 도시구조물·가로시설물, 공원, 광장 등 가로환경조성사업 및 경관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자치구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시설물)
- ⑤ 경관법상 경관위원회 심의 사항
- ⑥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 ⑦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자문 대상

- ① 관리대상 광고물(별표 2)의 규격, 색상 등 관리에 관한
자치구간의 형평성과 통일성 확보에 관한 사항
- ② 자문대상 공공건축물(별표 3)의 외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 ③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
- ④ 경관위원회의 자문 사항
- ⑤ 그 밖에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부산광역시

(1) 공공디자인 조직 운영

- 도시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개념

“도시디자인”이란 도시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건축물·옥외광고물 및 도시시설물의 색채·형태·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에 대한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 자치법규 현황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08. 3.) 경관/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 통합 조례
내용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시행계획, 경관계획, 공공디자인계획 및 광고물관리 계획, 디자인위원회,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지역디자인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인 설립 운영,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운영

- 디자인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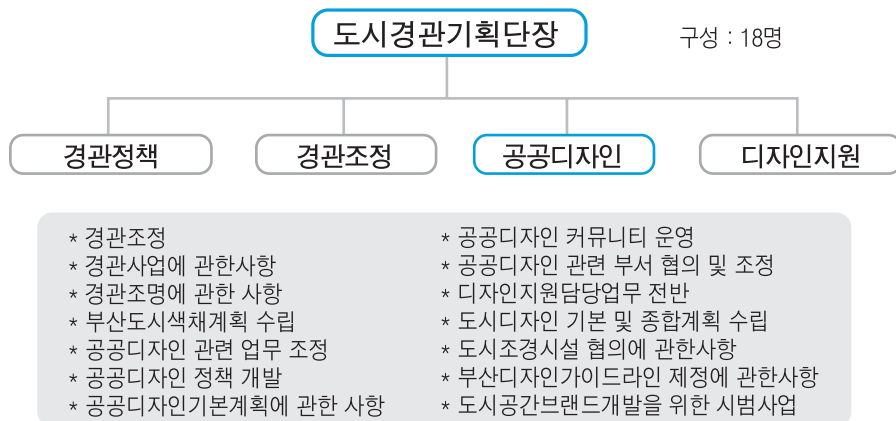
**비전 : 자연과 생활환경이 조화로운 경관도시
글로벌 도시디자인 기반구축 전략**

- ① 부산다운 경관조성 기반 구축
- ② 아름다운 해양도시 경관창출
- ③ 쾌적하고 품격있는 공공디자인 개선
- ④ 걷고 머물고 싶은 가로경관 조성

- 도시디자인 관련 조직

도시경관기획단 : 1단 4담당 1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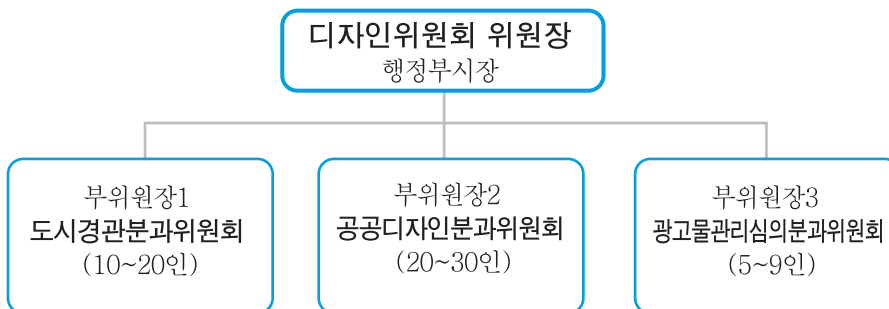
단장은 계약직 가급이며, 행정·건축·조경·전기직으로 구성되었다.



(표24) 부산시 공공디자인 조직 구성

2) 부산광역시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장 1명(행정부시장),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60명 이내로 구성되었다.



(표25) 부산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구성

• 심의 대상

- ①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② 도시디자인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③ 도시구조물·가로시설물(별표 2, 제4호의 문화관광시설을 제외)의 설치 및 보수
- ④ 구·군 및 공공기관에서 심의를 청하는 사항
- ⑤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⑥ 경관법상 경관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자문 대상

- ① 가로시설물(별표 2, 제2호) 중 문화관광시설의 설치 및 보수
- ② 도시디자인 관련한 노후.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 ③ 구·군 및 공공기관에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④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⑤ 경관법상의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3. 대구광역시

(1) 공공디자인 조직 운영

- 자치법규 현황

대구광역시 경관조례('06. 7.) : 별도의 도시디자인 조례 없이 경관 조례로 통합 운영(경관범위에 도시디자인 영역 포함),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운영
경관계획 수립, 경관개선사업 시행(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 나들목, 국도, 철도 변 등 지역적 특성을 강화, 시장이 경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경관관련제도 운영(경관사업추진협의체,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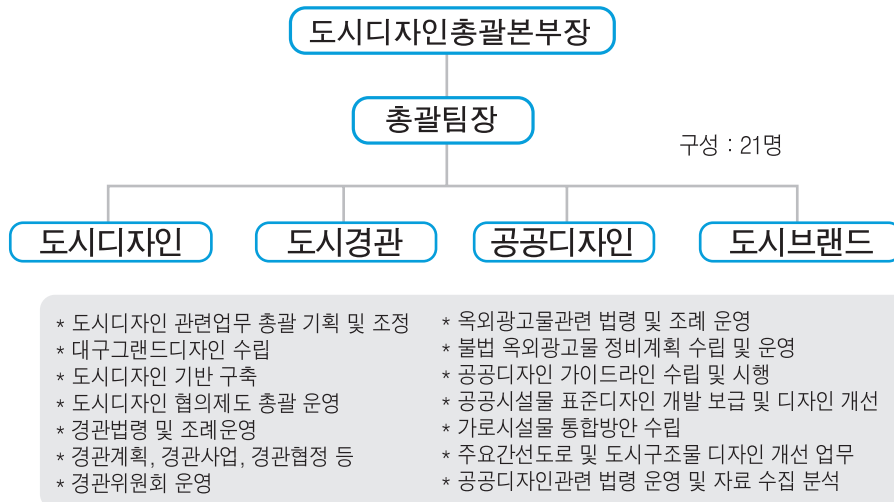
- 디자인 전략

비전 : 합리와 이성에 바탕을 둔 품위와 격조를 지닌 도시-대구성의 회복
행복을 키우는 도시디자인 기본전략

- ① 상상력을 키우는 디자인
- ② 삶이 피어나는 디자인
- ③ 짜임새가 있는 디자인

- 도시디자인 관련 조직

도시디자인총괄본부: 기존 도시경관과를 개편, 1본부 4담당 21명으로 구성



(표26) 대구시 공공디자인 조직 구성

(2) 경관위원회

경관조례 제정·공포('08.10.)에 따라 기존 위원회 및 자문단(도시디자인자문단, 도시경관자문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을 통합 개편,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위원 호선)을 포함한 10명~ 20명으로 구성되었다.

• 심의 대상

- ① 경관시범지역 지정(제6조)에 관한 사항
- ② 경관사업 등(제15조)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③ 경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가 곤란한 사항
- ④ 도시시설물(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 포함) 개선사업의 디자인 및 설치 위치에 관한 사항
- ⑤ 낙동강, 금호강, 신천 등 하천변의 경관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⑥ 대형옥외광고물의 디자인 및 설치위치에 관한 사항
- ⑦ 기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자문 대상

- ① 구청장·군수가 별도 용역으로 발주하는 경관사업
- ②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개정제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4. 인천광역시

(1) 공공디자인 조직 운영

• 자치법규 현황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03.12.) 별도의 도시디자인 조례 없이 경관 조례로 통합
경관 및 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도시미관개선, 야간경관조명, 공사장가림막

• 디자인 전략

비전: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도시경관 창출

기본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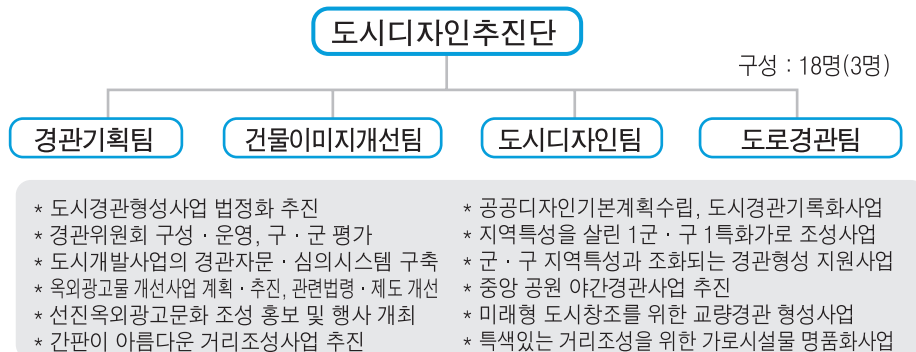
- ① 효율성 높은 경관형성 추진체계 구축
- ② 특색있고 실효성 있는 경관형성사업 추진
- ③ 명품도시에 어울리는 도시디자인
- ④ 大觀小察 개념의 경관형성 사업추진
- ⑤ 그 밖에 시장이 경관 형성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도시디자인 관련 조직

도시디자인추진단

기존 도시경관과(1과 4담당 17명)를 개편, 1단 4팀 18명으로 구성

IFEZ 도시관리과 도시디자인/5명 : 도시경관, 도시디자인, 도시경관위원회 담당



(표27) 인천시 공공디자인 조직 구성

(2) 경관위원회

인적구성 : 행정부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3명, 시의원 1명, 전문가 15명

• 심의 대상

- ① 군수 구청장이 수립한 특정경관계획
- ② 시장이 군·구 경관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 ③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④ 그 밖에 시장이 경관 형성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자문 대상

- ①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을 인가 할 때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 ②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 ③ 군수·구청장이 경관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 ④ 그 밖에 시장이 경관 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광주광역시

(1) 공공디자인 조직 운영

• 도시디자인 개념

‘도시디자인’이란 도시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건축물·옥외광고물 및 도시시설물의 색채·형태·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에 대한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 자치법규 현황

광주광역시 경관조례('05.1.): 경관조례와 별도로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관리위원회

광주광역시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07.10): ‘빛의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야간경관 조성, 정의와 목표, 기본계획 수립·시행, 야간경관조명 활성화: 야간경관활성화추진협의체, 야간경관개선협정, 야간경관활성화위원회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공공디자인의 정의와 원칙 제시, 기본계획/가이드라인, 총괄계획가/시범가로/개발비용, 공공디자인위원회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광주 디자인산업 진흥사업 수행을 위한 법인 설립과 운영, 광주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 디자인 전략

비전: 디자인 명품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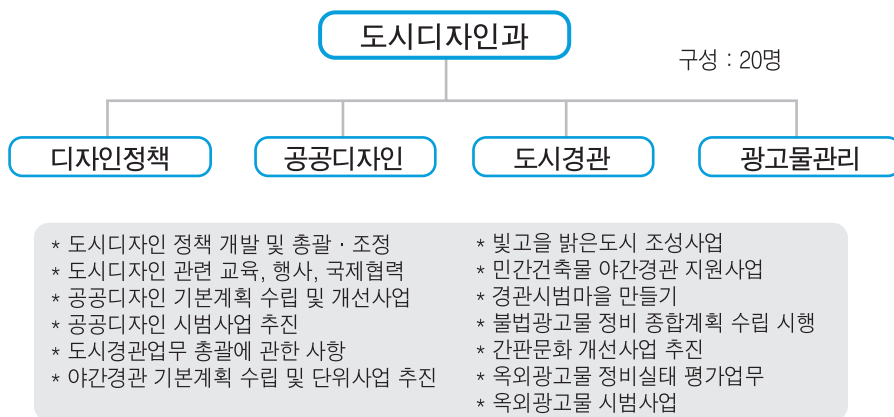
- ① 민주·인권·평화의 사람중심 디자인도시(Humanity)
- ② 소통·교류 만남의 예술 디자인도시(Community)
- ③ 지속가능한 친환경 디자인 도시 (Sustainability)

4대 기본전략

- ① 환경친화적인 디자인 광주 건강한 광주
- ② 함께하는 디자인 광주 친절 소통의 광주
- ③ 문화가 집적화된 디자인 광주 예향의 광주
- ④ 통합·비움의 디자인 광주 쾌적한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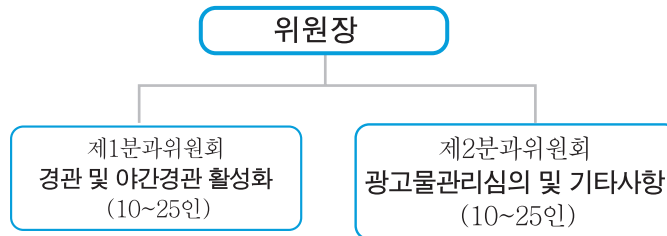
• 디자인 기구 및 조직

2009년 도시건축국에서 도시마케팅본부 산하로 이동, 1과 4담당 20명 도시디자인총괄단(단장:국장급)으로 개편 추진



(표26) 광주시 공공디자인 조직 구성

(2) 경관관리위원회



(표27) 광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구성

(3)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행정부시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

필요한 경우 책임위원을 포함한 3인 이상 소위원회 혹은 3인 이내 위원이 심의·자문

• 심의 사항

- ①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② '광주광역시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 제17조에서 심의토록 한 사항
- ③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 ④ 제29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범지역 등의 지정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 ⑤ 제30조에 따른 도시경관상 수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자문 사항

- ①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 ②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시 및 구 건축위원회포함)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경관에 관한 사항 중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④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6. 지자체 운영의 특징

1) 경관,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의 혼재

대부분의 광역지자체가 경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외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경관 조례외에 공공디자인 조례를 병용하고 있다. 경관 조례와 도시디자인 그리고 공공디자인 간의 위상에 있어서 경관을 상위 개념으로,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은 경관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이면서 서로 같은 위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서울과 대구시가 도시디자인, 경관, 공공디자인 순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2) 전략의 중복 및 혼재

공공디자인을 운용하면서 당연히 갖추거나 일반적으로 지향하는 개념을 목표를 세우거나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인 목표의 설정은 공공디자인이 본래 추구하는 지역 특성화로 이어지는데 저해하게 된다.

3) 지역 형태에 따른 차이

광역시와 광역도의 관련 조직 구성 및 명칭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광역시의 경우 도시디자인이란 명칭의 조직을 구성하여 활발히 운영하는데 비해 광역도에서는 건축 도시 관련 소관의 부서로 명명하고 있다.

지자체	조례제정현황			상호 위계	관련 조직 현황		
	경관조례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소속	부서명	규모
서울특별시	●	●		도시디자인 > 경관 > 공공디자인	별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110명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 경관 > 공공디자인	별도	도시경관기획단	18명
대구광역시	●			도시디자인 > 경관 > 공공디자인	별도	도시디자인총괄본부	21명
인천광역시	●			경관 > 도시디자인 = 공공디자인	별도	도시디자인기획단	18명
광주광역시	●		●	경관 > 도시디자인 = 공공디자인	도시건축국	도시디자인과	21명
대전광역시	●			경관 > 도시디자인 = 공공디자인	도시주택국	도시디자인과	16명
울산광역시	●			-	건축주택과	계장급	5명
경기도				-	기획조정실	과장급	22명
충청북도	●		●	-	균형발전국	과장급	16명
충청남도	●		●	-	도시주택과	공공디자인계	5명
전라북도	●			-	건설교통국	디자인정책과	26명
전라남도	●		●	경관 > 도시디자인 = 공공디자인	관광문화국	공공디자인과	10명

(표28) 광역지자체 디자인 관련 현황

제 4장 충남 공공디자인 현황 및 문제점

1. 공공디자인 인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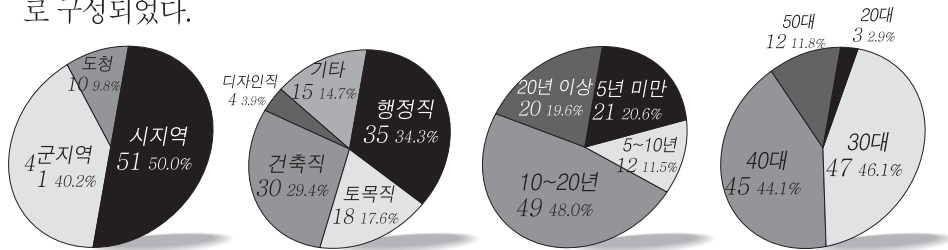
1. 조사 절차 및 방법

- 조사 목적 :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인식도 및 운영중인 조직 구성을 파악
- 조사 기간 : 2009년 6월 18일 ~ 7월 3일
- 조사 대상 : 충청남도 본청 및 산하 시·군의 공공디자인 업무 관련 공무원
- 조사 방법 : 설문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지 취지 및 응답 방법을 설명하고 작성
- 시와 군 및 교육장소에서 배포 및 조사를 하여 총 120부가 회수되었고 이중 활용할 수 있는 102부를 통계 분석하였다. (천안 8, 공주 10, 보령 8, 아산 8, 서산 6, 논산 7, 계룡 4, 금산 5, 연기 6, 부여 6, 서천 5, 청양 3, 홍성 6, 예산 3, 태안 5, 당진 8, 충남도 10)

2.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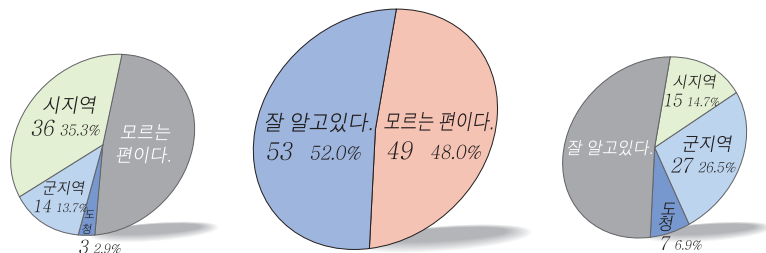
(1) 응답자의 구성

- 시 지역 50%, 군 지역, 도청 공무원 10%로 구성, 행정직 34%, 건축직 30%, 디자인 전공자는 4%, 10~20년 근무한 공무원 49%, 30대가 46%, 40대가 44%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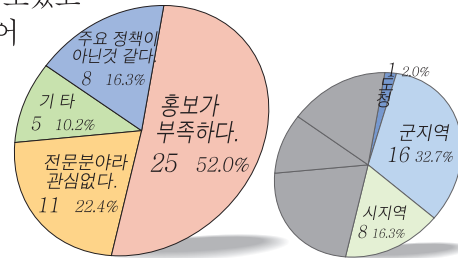
(2) 공공디자인 정책의 인식을 묻는 질문에

- 전체 응답자의 52%가 잘 알고 있다고, 48%가 모르는 편이라고 응답 하였다.
- 인지하는 응답자 중 시 지역이 35.3%, 군 지역은 13.7%으로 응답자 수를 감안하면 시 지역의 인식도가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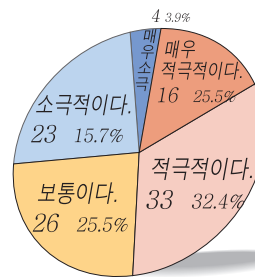
(3) 공공디자인 정책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모르는 편이라는 응답자 만 대상)

- 홍보 부족이 52%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전문 분야라서 관심이 없다가 뒤를 이어 22.4%로 나타났는데, 군지역에서의 홍보 부족이 32.7%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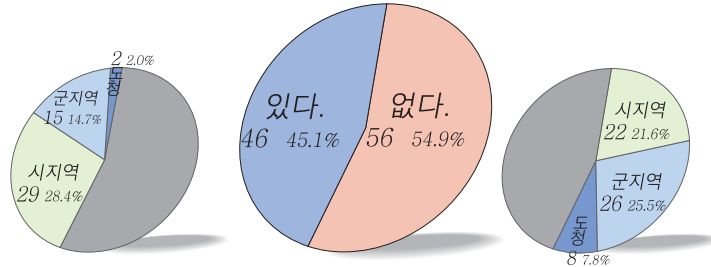
(4) 소속 단체의 공공디자인 정책에 대한 의지나 추진 태세를 묻는 질문에

- 매우 적극적이다와 적극적이다 라는 응답이 57.9%이며, 보통이 25.5%, 매우 소극적과 소극적이다의 합계는 19.6%로 나타나 적극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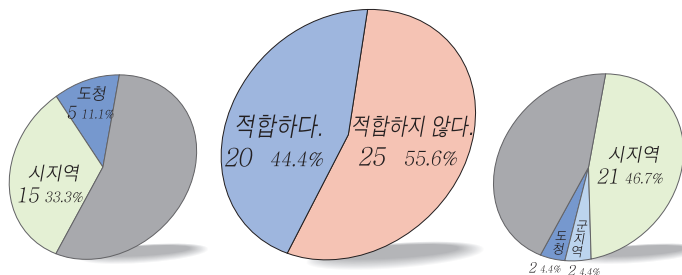
(5)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업무 수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 54.9%의 응답자가 수행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전문성이나 직무 경험과 상관 없이 업무를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지역 공무원의 수행 경험이 군 지역 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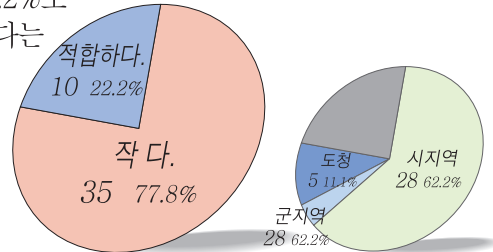
(6) 공공디자인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지자체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조직의 소속 및 위치의 적합성을 묻는 질문에(응답자 45명 중 시 지역이 36명)

- 55.6%의 응답자가 현재의 소속과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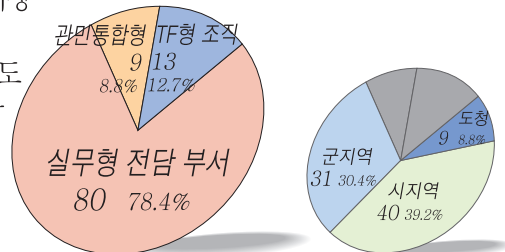
(7) 공공디자인 조직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조직 규모의 적합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45명 중 시 지역이 36명)

- 조직의 규모가 작다는 응답이 77.8%로 나타났으며, 적합하다는 의견은 22.2%로 전반적으로 현재의 조직 규모가 작다는 의견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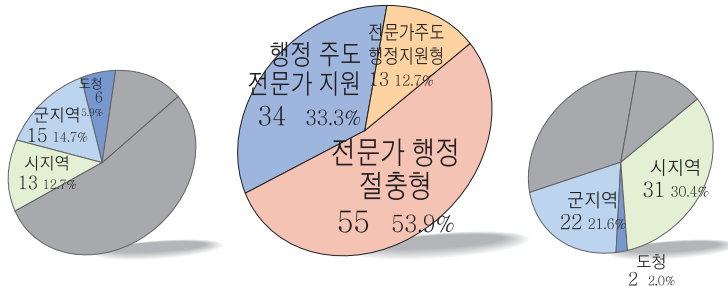
(8) 소속 단체에 적합한 공공디자인 부서의 기능 형태를 묻는 질문에

- 45%의 응답자가 업무와 계획을 수행하는 '실무형 전담' 형태를 시와 군 지역에 서 비슷한 비율로 선택했으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직접 주도하는 'TF형 조직형'이 12.7%, 민간이 주도 하고 관이 행정 지원하는 '관민통합형'이 8.8%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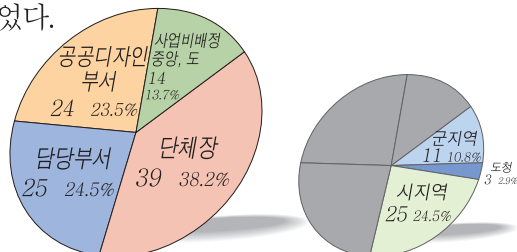
(9) 소속 단체에 적합한 공공디자인 부서의 인력 구성을 묻는 질문에

- 53.9%의 응답자가 디자인 전문가와 행정 인력이 절충된 구성을 선택했으며 행정이 주도하며 전문가 조직이 지원하는 인력 구성 형태도 33.3%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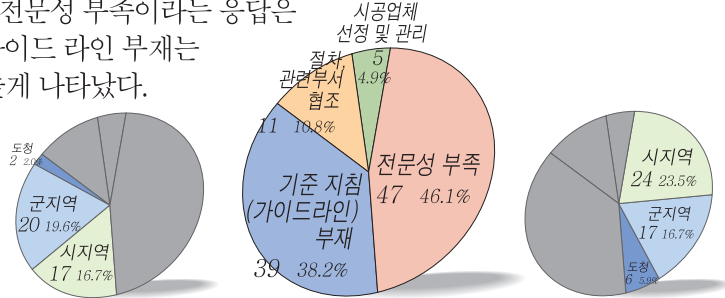
(10)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지배적인 의견 주도권을 묻는 질문에

- 단체장이라는 응답이 38.2%로 가장 높았으며 시 지역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담당 부서, 공공디자인 부서, 사업비를 배정한 중앙, 도 순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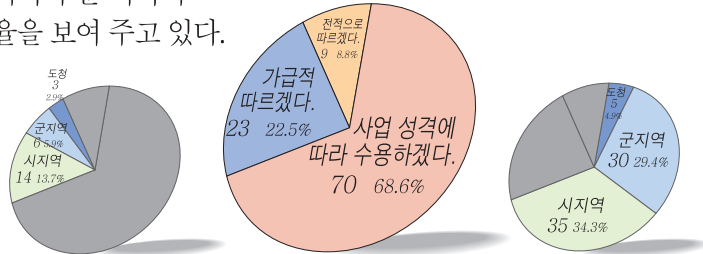
(11)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 디자인 분야의 전문성 부족이라고 46.1%가 꼽았으며 그 뒤를 기준 지침의 부재로 응답하였다.
- 디자인 분야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응답은 시 지역에서, 가이드 라인 부재는 군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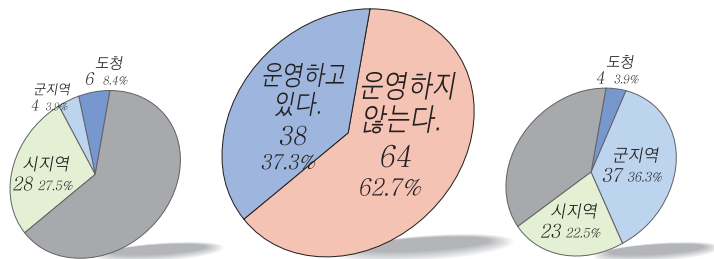
(12) 도에서 제정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 사업 성격에 따라 수용하겠다는 제한적인 수용 의사 표현이 6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 지역과 군 지역이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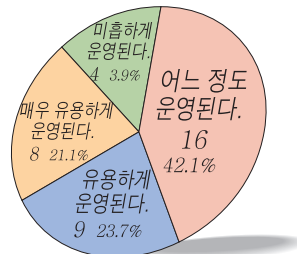
(13) 디자인 관련 자문단이나 위원회를 운영하는가 묻는 질문에

- 37.8% 만이 운영하는것으로 답하였다. (아산시, 공주시, 예산군 등 일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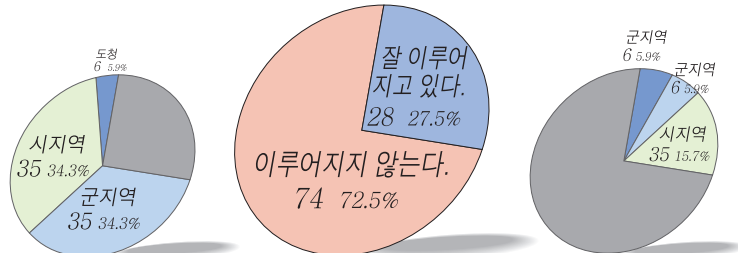
(14) 디자인 관련 자문단이나 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묻는 질문에

- 매우 유용하게 운영한다가 21.1%, 유용하게 운영이 23.7%로 44.8%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느꼈으며 미흡하게 운영됐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3.9%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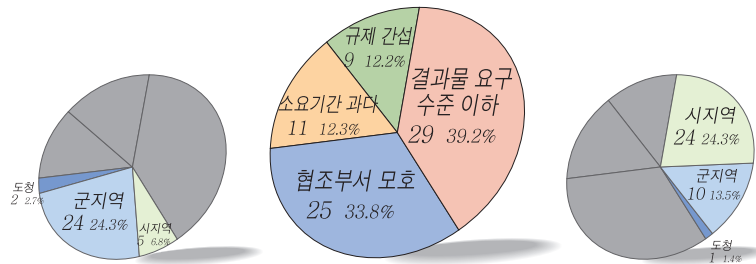
(15) 디자인 사업 진행시 디자인 부서나 관련 부서와의 대화나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72.5%로 높게 나타났다. (군 지역이 약간 높음)



(16) 디자인 사업 진행시 디자인 부서나 관련 부서와의 대화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 의뢰한 결과물의 수준이 기대에 못미치다는 의견이 39.2%, 다음으로는 협조 부서가 어디인지 모호해서가 33.8%를 나타냈다.



3. 응답 주요 내용

- 인식도 부족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는데 군지역이 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홍보부족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다.
- 전문성 부족
공공디자인 부서원 대부분이 디자인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이 1/3, 건축직, 토목직 순이며, 업무 수행에 있어 어려운 면을 전문성 부족으로 인식하고 있다.
- 조직 규모의 미흡
현재 구성되어 있는 디자인 조직의 규모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단체장의 사업주도권
디자인 사업 진행시 의견 주도권이 단체장에게 있다는 의견이 많게 나타났다.
- 상급 기관의 가이드 수용 태세
도에서 제정한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의 수용 태세에 사업성격에 따르겠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커뮤니케이션의 부족
사업 진행시 관련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 담당이 모호하기 때문에 원인으로 꼽고 있다.

2. 충남 공공디자인 조직 현황

충청남도 및 시·군의 공공디자인 조직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서산시와 계룡시를 제외한 시에서는 ‘공공디자인’ 또는 ‘도시디자인’이라는 명칭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과 관련된 국의 건축 도시주택과 소속의 계로 구성되어 있다.

아산시의 경우 다른 시보다는 규모가 큰 과(課) 규모의 조직으로 전문가 2명을 포함한 14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郡) 단위인 경우 금산군이 도시건축과 내에 도시디자인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진군이 도시경관팀을 구성한 외에 아직까지 다른 군에서는 전담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1. 충청남도 현황

(1) 공공디자인 조직 운영

- 공공디자인 개념

공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의 공간, 시설, 매체 등을 공공디자인 정책에 의해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실행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 자치법규 현황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조례('09. 4.)

공공디자인 용어정의, 대상물(별표1), 공공디자인 기본 원칙,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관계 기관의 협조 및 지원,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09. 4.)

2009년 4월 보완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행·재정 지원, 전시회, 심의위원회 구성

- 디자인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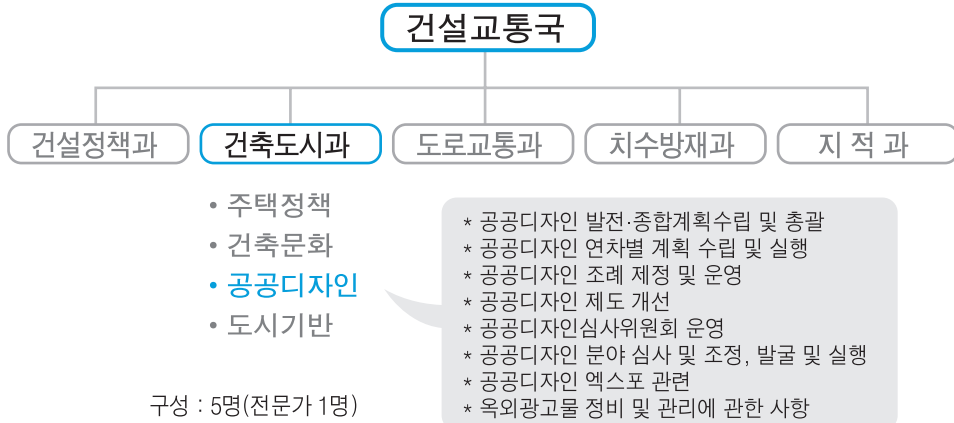
목표 : Renovate Chungnam

주제 : 공공디자인으로 자연을 품다.

- ① 통합 디자인 (total design)
- ② 사람 중심 디자인 (human design)
- ③ 참여 디자인 (participatory design)
- ④ 지속 가능 디자인 (sustainable design)
- ⑤ 지역 정체성 디자인 (local identity design)

• 공공디자인 업무 전담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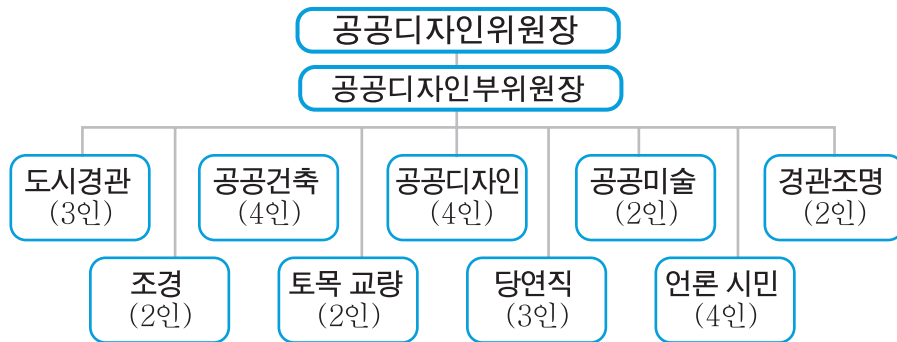
공공디자인계 : 미래전략팀에 설치했다가 가급 전문직을 보강하면서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에 재 구성 하였다. (5명)



(표29)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직 구성

(2) 공공디자인위원회

경관조례 제정·공포('09. 4.)에 따라 기존 공공디자인자문위원회를 개편 운영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로 구성(공무원 수 1/4 이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표29)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위원회 구성

• 심의 대상

- ① 공공디자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②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사항
 - ③ 별표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 ④ 도지사가 시행하는 도비가 지원되는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
 - ⑤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 *기본설계가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 정도 이루어진 때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한 경우 실시설계 착수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3) 도 수행 사업

• 도 수행 사업

충청남도에서 직접 도비로 운영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으로는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 운영사업과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사업이 있으며, 국비 지원 사업으로는 행정안전부 사업인 ‘희망근로사업’이 운영된다.

- ① 충청남도 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 운영(도비 9천만원)
- ②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도비 3천5백만원)
- ③ 희망근로 LIP 사업 꾸미지오 프로젝트 (1억2천6백만원)
- ④ 희망근로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 추진(45억1천4백만원)

• 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 운영은 충남발전연구원에 위탁하여 충청남도 권역별 운영위원을 구성, 시·군에서 의뢰받은 관련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인식 확산과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시군 지역	클리닉 자문 내용
천안시	벽화그리기 사업 디자인 자문
공주시	버스승강장 디자인사업, 지중화사업으로 인한 변압기 설치공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디자인 자문, 계룡면 길썰 미술로 조성사업, 21C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
논산시	논산시청 정문 출입구 개선, 대둔산도립공원 군지계곡 조교설치, 분회 경로당 신축사업, 논산 오거리 거리공간 조성사업
계룡시	계룡시 두계교 경관 조형물 디자인 자문, 계룡시 두계교 경관 조형물 디자인 자문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건물배치 및 디자인
연기군	재래시장 색채 디자인 계획, 조치원 일대 공원 조성사업
부여군	가로경관개선사업, 동문 로터리 조형물 설치 공사
서천군	장항물량장 데크 설치공사, 장항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신축건물 컬러제시
청양군	청양군 중심거리 가로간판 정비사업
홍성군	명동상가지역 시설기반공사에 따른 디자인, 장애인 복지센터 벽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사업 디자인 자문
예산군	예산군 버스정류장 디자인, 예산군 벽화그리기 사업,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 자문, 수덕사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태안군	백사장항 해상 인도교 교량디자인 보완 자문, 태안군 백사장항 드르니항 공원 조성계획
당진군	동문 로터리 조형물 설치, 고속도로 주변 홍보물 설치, 우두택지지구 공공시설물 개발

(표30) 2009년 충남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 컨설팅 내용

• 시·군지원 사업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도비와 시·군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중앙 공모사업 위주로 사업비 지원이 한시적이라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

①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

논산 오거리 정비(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공주시 제민천 개선(도비 1억5천만원, 시비 1억5천만원),
당진군 읍내리 거리정비(도비5천만원, 군비 5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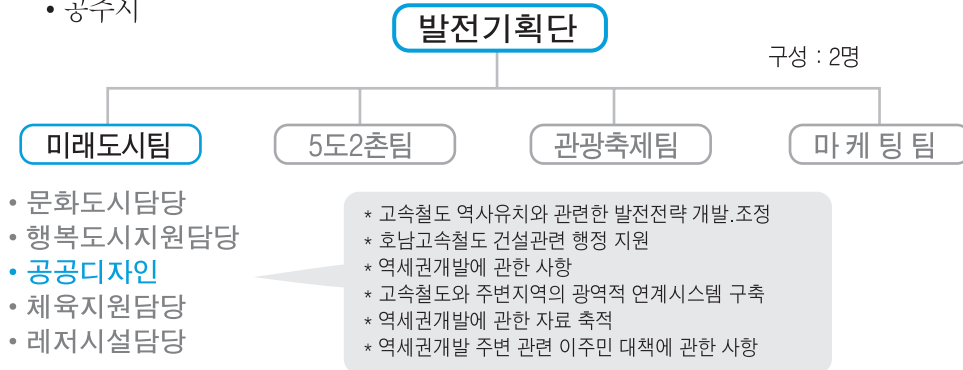
②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

아산시 역광장 주변거리 개선(도비 1억5천만원, 시비 1억5천만원),
홍성군 오관리 일원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③ 2009 충청남도 사인 한마당 (우수옥외광고대전, 도비 1억5천만, 군비 1억5천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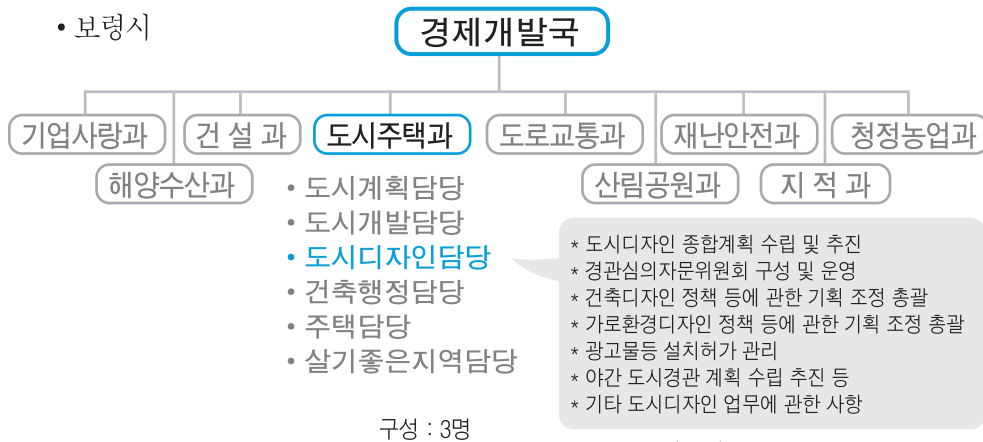
2. 시·군 조직 구성

• 공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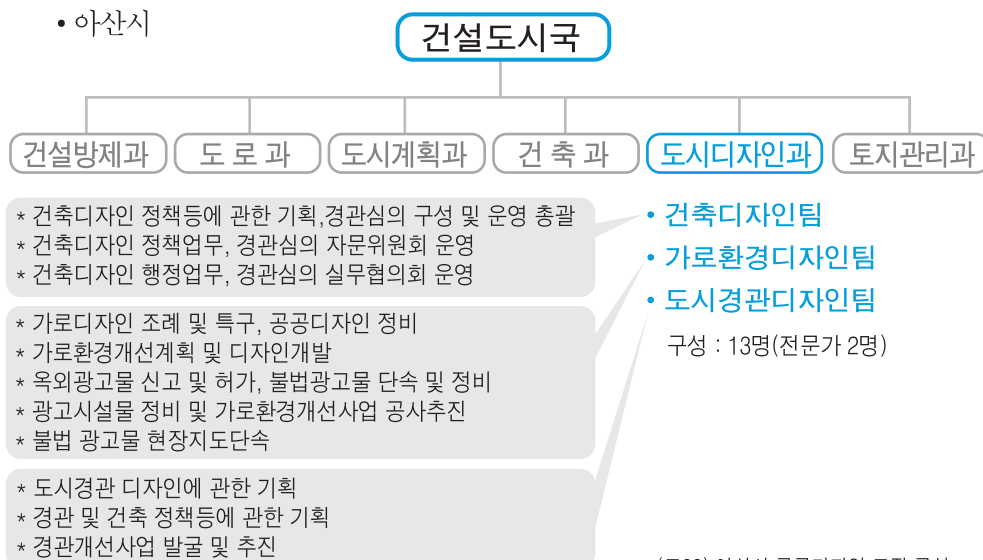
(표31)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직 구성

• 보령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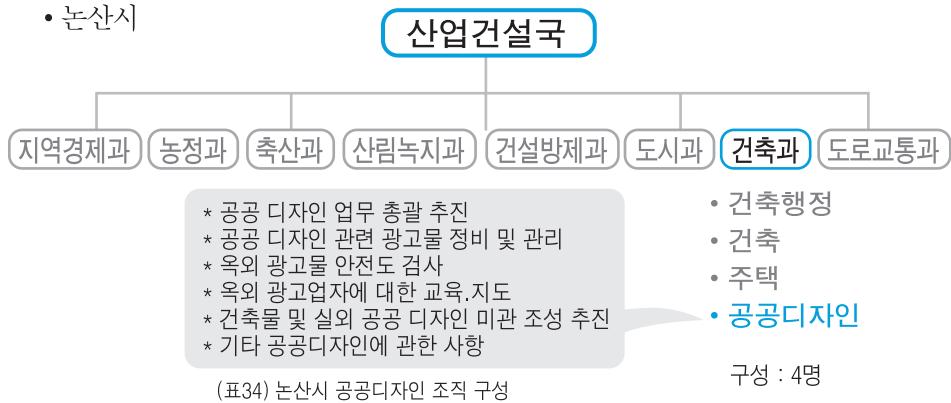
(표32) 보령시 공공디자인 조직 구성

• 아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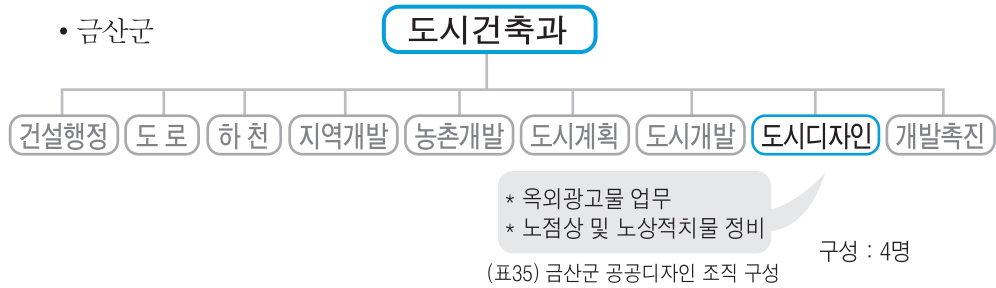


(표33) 아산시 공공디자인 조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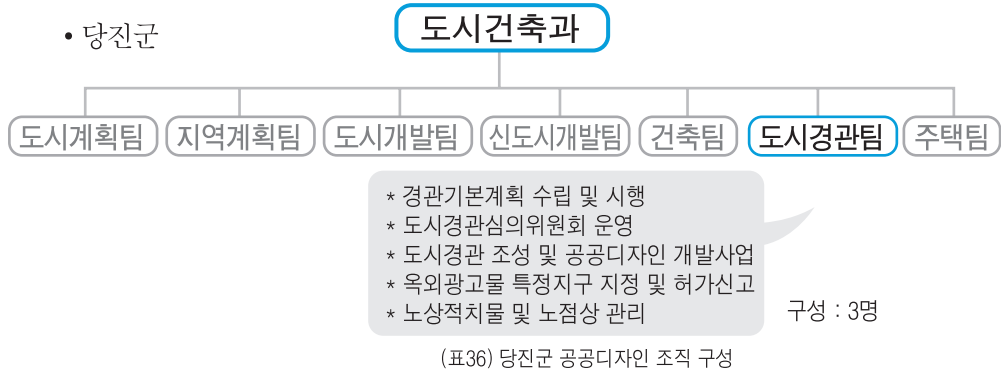
• 논산시



• 금산군



• 당진군



지 역	설치 부서	조직 위상	조직 규모	조직 구성 및 업무의 적극성		
				적극적	중간	소극적
충남도	건축	계 / △	5 (1) / △			조직 위상과 규모 업무의 평이성
천안시	건축	계 / ◇	3 (0) / △		조직 위상과 규모에 비해 업무 모호	
공주시	도시	계 / △	2 (0) / ×		조직 위상과 규모에 비해 업무 모호	
보령시	도시	계 / △	3 (0) / △		사업은 활발한 데 비해 규모는 작음	
아산시	도시	과 / ○	13 (2) / ○	조직의 구성 및 규모, 사업 추진 등		
논산시	건축	계 / △	4 (0) / △			조직의 구성 및 업무의 신선감 부족
금산군	도시	계 / △	4 (0) / △			옥외광고물 위주
당진군	도시	계 / △	3 (0) / △			조직의 구성 및 업무의 신선감 부족

조직위상 : 도 시경우 직속본부○, 국, 실○, 과◇, 계△, 그외×, 군 경우 직속본부○, 과○, 계◇, 인원△, 그외×

조직규모 : 도 경우 20명 이상○, 19~15○, 14~10◇, 9~5△, 5 미만×, 시군 경우 15명 이상○, 14~12○, 11~8◇, 7~4△, 3명 미만×

(표37) 충남 시군 공공디자인 조직 현황

3.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1) 충남도의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공공디자인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부터 중앙 및 지자체의 행정 조직에서는 공공디자인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디자인 관련 사업들이 이미 진행되어 왔었다. 충청남도청 실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디자인 관련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실/실무과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
공보관실		국정 및 도정 홍보, 도 홍보관 운영, 도정광고, 홈페이지 구축 · 운영, 도정신문 발간	도정홍보(매체), 홈페이지, 간행물 등
여성정책관실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모 · 부자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공공시설의 설립 및 운영	업무 및 1층근린생활 시설 건축
기획관리실	기획분야	도 장기발전계획 종합조정 및 관리, 행정혁신 박람회 업무추진	종합계획, 전시박람회
	교육협력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평생학습 축제 업무	환경개선, 축제 운영
	정보화담당	u-충남 기본계획수립 및 관련 사업추진, 정보화마을 신규 조성 추진	정보화마을 조성
	균형발전담당	도 종합계획 수립, 도 장기발전 비전 구상, 지역균형발전사업, 금강권 광역복합개발, 공공기관 이전지 개발	각종 종합계획 수립, 공공기관 이전지 개발
경제통상실	투자유치담당	국내기업유치 및 공장설립, 국내외 투자유치홍보, 투자유치 박람회	공장설립, 홍보, 박람회
	경제정책과	재래시장 · 상점가 육성 및 지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재래시장, 어린이시설
	기업지원과	국내 시장개척(전시회, 박람회 등 참가지원) 및 상품 홍보	홍보, 박람회
자치행안과	총무과	도기 및 디자인표준화 관리, 충남월드브랜드, 청사관리, 조경수 관리	도 이미지관리, 청사
	도의세마을과	지역개발업무 총괄 기획 · 조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소도읍 개발 사업,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소도읍개발, 도계마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지방문화원 및 문화의 집 지원 · 육성, 시 · 군 향토문화축제 지원 육성, 백제문화제관련, 창의적예술프로젝트 사업, 공주 · 부여역사 문화관광도시 조성사업, 문예회관 건립 및 운영, 도서관건립 및 운영, 미술관 · 박물관 운영에 관한사항, 기념시설건립 운영, 도청 신도시내 문화지구 조성, 문화재 보존관리 종합계획, 고도보존법 관련, 고도 옛모습되살리기 사업	문화원 및 문화의집 축제 운영, 문화관광 도시 조성, 문예회관, 도서관 건립, 미술관 박물관 설립, 기념시설 건립, 고도옛모습 사업
	관광산업과	관광 홍보계획 수립 · 조정, 관광홍보를 제작 및 관리, 관광안내 및 홍보시설 관리, 국내 · 외 행사 관광홍보관 운영,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정 관광지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서해안권 관광벨트 조성사업, 기업도시 개발 및 추진, 관광특구 개발 및 관리, 안전도 관광지(꽃지지구) 개발 관련 대외 홍보	홍보, 관광안내 및 홍보 시설, 홍보관, 공중화장실(관광지내), 기업도시 개발 등
	체육청소년과	각종 체육대회 개최,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 및 지원, 체육시설 사업계획 수립추진	체전 개최 운영,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문화산업과	백제역사재현단지 세부시설계획, 대백제전(옥외시설 광고물 설치 및 운영, 표상을 개발 및 사후관리, 홈페이지 제작 · 운영 및 홍보물 제작, 기타 전시 및 시설관련 업무)군문화엑스포(각종 매체의 홍보, 교통 · 안전 · 위생 등 행사운영계획 수립)	백제역사재현단지, 대백제전 시설, 광고, 군문화엑스포 홍보 등
농림수산국	농업정책과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산물공판장 및 도매시장 설치 운영,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육성	녹색농촌체험 마을, 공판장 설치, 브랜드
	농산과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충남쌀 소비촉진, 홍보, 우수브랜드 육성	원예작물, 쌀 브랜드
	농촌개발과	광역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결정협의, 대단위농업 종합개발사업(국가시행)추진 협조, 농업기반시설물 안전관리,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 문화 · 전원마을 조성사업	도시계획, 농촌개발과 농업기반시설물, 농촌 마을 문화전원 마을 조성
	산림과	산촌종합개발, 산림 휴양시설 조성운영, 도시 숲 · 학교 숲 조성관리, 국토공원화 및 조경관련 업무, 가로수 조성 관리	산림 휴양시설 조성, 조경, 가로수 조성
	수산행정	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 위판장, 집하장건설운영, 어촌어항발전 기본 계획 수립, 어촌종합개발 및 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	수산물시장, 어촌어항 기본계획, 체험마을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공립치매병원 건립 지원	병원 건립
	노인장애인과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지원, 노인복지시설 종합계획, 권역별 실버타운 조성사업,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노인 장애인복지시설
	보건위생과	인삼약초바이오밸리 조성	특구조성
	환경관리과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공원시설
	수질관리과	지방산업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 공중화장실 관리 · 운영업무,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관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설치	산단폐수처리장, 공중화장실, 하수종말처리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국실/실무과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
건설교통부	건설정책과	광역개발권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 추진,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 실시계획 승인 및 준공인가, 특정지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백제문화권개발사업 지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 지원, 도시계획의 수립 · 총괄 및 조정, 도시기본계획 승인, 도시공원관리, 해양환경개선사업 추진	지구개발, 특구개발, 도시계획, 공원조성, 해양시설
	건축도시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 · 개정 및 운용,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건축심의 및 사전승인업무, 공공디자인 발전 · 종합계획수립 및 총괄,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및 운영, 공공디자인 엑스포 관련,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계획 수립 · 추진, 도시계획사업 승인 및 지원, 도시지역내 가로등 관리, 자전거도로 관련업무, 도시개발사업의 승인 및 지원, 도시환경 정비사업, 아산신도시 개발계획 기획 · 조정 총괄, 신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사업계획 수립 승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	조례 제 · 개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디자인사업, 전시시설, 옥외광고물 정비 관리, 도시환경정비, 신도시 개발,
	도로교통과	버스 승강장 건립 사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업무, 지방도로 도로표지판 관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버스승강장 건립, 도로표지판 관리
	치수방재과 지적과	하천점 · 사용허가 및 하천관리, 하천구역내 공작물설치허가 및 협의 도로명 주소 등 표기법 관련 업무	하천 공작물 설치 도로명 주소 표기
	주민지원과	도청이전 및 행정도시 홍보기획에 관한 업무	도청 홍보
도청이전본부	개발과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전략의 수립, 기반시설설치 종합계획 수립, 도로 · 주차장 · 자동차정류장 등 교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 결정 및 운영, 도시공원 · 녹지 · 하천변 경관조성계획의 수립, 학교 · 유치원 · 도서관 등 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공공 ·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병원 · 보건소 · 화장장 · 장례식장 등 보건위생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공원 · 녹지 등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전략, 기반시설 설치, 교통시설 설치, 공원 녹지 하천변 경관 보건위생시설 설치,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소방본부	소방관서 신·증설에 관한 사항, 소방홍보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장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지원	업무시설 도청 홍보
종합건설사업소		도로 및 교량공사의 설계 · 시행과 유지관리, 건축사업 시행,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공영개발 추진, 하천사업의 설계 · 시행	도로, 교량 설치, 단지 조성, 하천사업

(표38) 충청남도청 실국 디자인 업무

(2) 업무별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충청남도에서 수행되는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① 지역발전종합계획 : 권역별 개발, 신도청도시 개발 등
- ② 마을가꾸기 : 정보화마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소도읍 개발사업, 도계마을 등
- ③ 문화 역사 관련 : 백제역사재현단지시설, 공주 · 부여역사 문화관광도시 조성사업, 문예회관, 도서관, 미술관 ·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념시설건립 운영 등
- ④ 복지 관련 시설 : 공립치매병원,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지원, 권역별 실버타운 조성사업,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장애인복지관 관련 등
- ⑤ 환경시설 : 공원사업, 농공단지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설치, 공중화장실, 빗물이용시설 설치관리,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등
- ⑥ 도시 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건축심의 및 사전승인업무, 공공디자인 관련,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도시계획사업 승인 및 지원, 도시지역내 가로등 관리, 자전거도로 관련업무, 도시 환경 정비사업 등
- ⑦ 가로 및 하천 : 버스 승강장 건립 사업, 지방도로 도로표지판 관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점 · 사용허가 및 하천관리, 도로명 주소 등 표기법 관련 등
- ⑧ 도이미지 관리 : 도기 및 디자인표준화 관리, 충남월드브랜드, 청사관리 등
- ⑨ 홍보 : 매체를 이용한 광고, 홈페이지 등 도청 홍보 등
- ⑩ 행사 및 전시 : 연속으로 개최되는 체육행사 및 관광 이벤트와 전시설치물 홍보

3.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의 문제점

지역 계획을 이루어내는 새로운 수단이자 넓게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의 고유성을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해결 수단인 공공디자인을 비중있는 정책으로 도입하여 활용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충청남도는 다른 광역도에 비해 이른 시기인 2008년 한해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9년에 본격적으로 공공디자인을 정책에 도입하여 조직 구성 및 사업 발굴 및 실행 등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 조직 구성, 충남의 공공디자인의 방향 설정, 기본 계획 수립, 관련 조례 제정 및 각 시·군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이 짧은 기간이지만 단계별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보다 효율성 있는 공공디자인 영역의 정착을 위해서는 시작단계인 현 시점에서 도입 과정에서 구상하고 기대했었던 계획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편차의 폭을 좁히는 제도 수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측면에서의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지역에서 공공디자인을 도입하는 큰 목적인 지역 정체성의 제고를 위한 지역 차별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여부이다. 이를 위하여 충청남도만의 고유한 공공디자인 영역 및 대상 설정과 충남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충청남도 모습이 이어지며 충청남도가 갖추고 지향 하여야 할 환경과 모습 그리고 수준을 예측하여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비전 및 전략이 우리 지역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를 알아 보아야 한다.

둘째, 다른 사례에서 빈번히 나타났듯이 공공디자인의 성격이 사적 재산권이나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거나 규제하기 때문에 명확한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권고 수준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 실행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광역시나 기초지자체와 달리 도 전체의 구상과 각 시·군의 계획과 사업을 조율하고 이끌어가기 위한 행정 조직의 위상 및 규모가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넷째, 공공디자인의 성공 여부는 행정 주체의 의지나 실행력 외에도 수혜자이며 사용자인 지역 주민의 인식과 참여 여부가 관건이 된다. 관련 공무원 인식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행정 조직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도 생소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이해와 동참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조직 내부와 지역 주민간의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마련되었는지 알아 본다.

1. 명확성이 결여된 목표 지향

(1) 일반적인 대상으로 지역 특성이 미흡

경관을 포함한 공공디자인이 추구하고 다루는 주요한 본질이 지역 특성의 제고에 있음에도 충남에서 다루려는 공공디자인 영역이 충남 지역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산어촌보다는 대도시 위주의 목표와 사업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공디자인을 도입하는 목적이 내적으로는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이며, 외적으로는 지역 이미지 수준을 개선하여 장소적 가치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는 해양 자원을 비롯한 농산촌을 대상으로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공공디자인이 자연과 문화자원 등 전 분야의 총체적인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성격의 영역임에는 분명하지만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고 개선시켜야 할 요소 및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대상의 개선 및 개발 원칙을 우선 수립하여야 한다.

(2) 모호한 비전 및 전략

공공디자인 확산의 초기 단계에서 지자체가 내세우는 비전 및 전략의 대부분이 공공디자인을 수행하면서 당연히 지향하고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철학이나 일반적인 방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비전으로는 자기 지역의 고유한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차별화 된 전략을 수립하기도 어렵다.

충남의 경우에도 자연이라는 주제는 경관 계획이나 환경디자인이 추구하는 근간이 되는 기본 방향이며 통합, 사람중심, 지역 정체성이라는 개념 역시 공공디자인의 기본 항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남의 고유성을 증진 시키기 위해 각 개념 요소의 배합 강약 등의 조절되거나 새로운 방안이 가미된 추진 전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추진 전략은 목표 달성을 위한 일관된 태도를 갖추어야 하며 애초 추구한 의도대로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 결과가 창출되는지 단계별 검증이 필요하다.

2. 실행력 부족한 근거법

(1) 경관법 범주에서의 문제점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마련 없이 지자체 차원의 조례만으로는 한계에 이른다는 사실은 이미 일본의 경관법 제정 과정을 통해서 익히 알 수 있다. 현재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조례는 2007년 제정된 경관법을 모태로 하는데 경관법은 지역의 이미지를 공적, 사적 영역을 포함하여 보다 큰 틀에서 다루어진다.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역시 경관법이나 조례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근거법이 없는 현실에서는 강력한 행정력의 발휘가 어렵고 권고 수준의 느슨한 실행 수준에 머무는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2) 경관조례와의 차별성 부족

경관법이나 건축법이 공공디자인의 범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디자인 조례를 운용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경관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경우 중복된 내용 및 조례간의 위상 체계 등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3. 제한적인 조직 및 인력

(1) 조직 규모 및 기능 재정립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근거로 하여 공공디자인 관련 주무 부처의 단일화를 내세우며 담당 부서의 디자인 관련 업무 및 규모를 확대시키자는 주장이 일반적인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광역도의 역할인 중앙 정부와 기초지자체간의 매개 및 조정, 저변 확대 등의 업무 기능을 감안 한다면 현실적인 기능의 부여 및 적합한 위치와 규모를 갖춘 구조로의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공공디자인의 영역이 건축 및 시설물 등의 건설 분야와 산업과 연관된 경제 분야,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홍보 분야 및 문화 콘텐츠를 다루는 영역 등 폭 넓은 분야를 망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규모와 위상이 요구된다.

(2) 인력의 전문성 미흡

공공디자인을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분야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건축 및 토목, 행정직 모두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디자인 전문직의 채용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미미한 수의 전문직이 신분기 불안한 계약직 형태로 채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9년 3월 국가직 공무원 시설직류와 지방직 녹지직렬에 각각 ‘디자인직류’가 신설되면서 전문화에 새로운 청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4. 원활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

(1) 조직 내부 및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

공공디자인의 성공 여부는 중앙 정부나 지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수용하고 혜택을 받으며 평판하고 지속시켜나갈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주민에게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인식 확산과 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정보 교환과 전달 효과가 높은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방식의 도입 및 활용이 요구된다.

(2) 행정 내부에서의 저조한 인식

인식 설문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디자인의 도입과 필요성에 대해 2년 이상 공공디자인 열풍이 불었음에도 인식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사업 추진시 관련 부서의 비협조를 예상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 공공디자인 현황 실태를 주요 항목별로 나누어 수범 사례 지역의 운영과 대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지도자가 주도하여 미래 경쟁력 확보의 기반으로 디자인 분야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며, 교육 시스템 마련 등 디자인 기반 확충	중앙정부 정책방향	디자인을 국가 기초정책으로 표명하였지만, 공공디자인 정책 담당 주무 부처의 혼선 등으로 지자체의 기능 및 조직 구성도 방향을 찾지 못함
일본은 오랜 기간 지자체가 중심적 역할을 하여 중앙차원의 경관법을 제정하게 주도하는 과정에서 보듯이 주민과 지방의 필요가 수반된 법임	법규 및 조례	경관법에 근거한 경관조례 외에 자주법인 공공디자인 조례만으로는 운영상의 한계를 보여주며 각 조례 간의 영역이 모호함을 보임
일본과 유럽은 정치 유형이 지방분권 형태로 디자인 정책에 있어서도 지역 디자인정책은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음	지방역량	디자인진흥원과 지역 소재 디자인 거점센터가 있으나 공공디자인 분야는 제외되며, 중앙 부처의 공모전을 통한 지원금 배분이 영향력 있음
유럽과 일본 모두 전통건조물의 보존 등 건축 관련 위주이며, 사적 공적 영역의 구분 없이 경관 차원이나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관리 됨	영역 및 대상	사적 영역의 관리에 제한이 많기 때문에 공적 영역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공적 영역 외에 공공적 성격의 사유 영역을 포함하려는 추세임
정책과 사업 수행을 주도하는 복수의 부처를 운영하고 있어 계획의 완성 및 개발 소요 기간은 길더라도 주민 합의 완성도가 높게 이루어짐	조직 및 운영	사업 및 관리의 효율성을 내세우며 주무 부처의 통합을 유도하자는 목소리가 높으며, 조속한 기간내에 성과물을 완성하려는 경향이 짝음
일본의 경우 학력, 전공과 관계 없이 해당 부서에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여 전문지식의 습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장 실무 능력을 중시함	역량 강화	일부 대규모의 조직을 사례로 하여 외형 불리기에 급급하며, 실질적인 조직 구성 보다는 전문가가 결여되어 형식에 치우친 운영 행태를 보임
중앙, 광역, 기초 지자체 제각기 분담된 역할과 책무를 갖고, 과잉디자인(설치)을 저지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신중한 개발을 지향하고 있음	비전 및 목표	공공디자인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지자체 목표로 설정하거나, 목표와 합치하지 않게 좁아져 시설물이나 조형물 설치로 인식됨
관련 법에 근거하여 중앙 및 지자체의 재정 등의 제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PF(세금 및 민간 컨소시엄인 PFI)로 조달되기도 한다.	재정 및 지원	재원 조달과 인력이 가장 큰 문제로 외부 위탁 운영비를 제외하면 중앙 부처의 공모사업의 지원금에 의존하여 지속적인 계획 수립이 어려움
일본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의 운영보다 민간과 공공간의 중재와 조정, 그리고 행정부서 간의 조정협의 역할을 수행 기능을 지님	조직내 커뮤니케이션	공공디자인 위상 확대 분위기, 부서간 업무 협력 경로가 형성되지 않아 부서간 대화가 순조롭지 못하며 시군은 지원금을 수혜에 따라 차별됨
지역 주민의견 청취 및 반영, 하위 지자체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며 사업에 대한 조급함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와 동의가 이루어짐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사유 재산에 대한 침해에 따른 반발, 개발 사업비의 수혜에 따른 주민에 대한 주도권 다툼으로 대화 태도의 기복과 상대성이 심함
영국의 경우 디자인 정책의 사업구조 형성은 하위 사업에 개입하지 않고 민간단체의 활동을 측면 지원하고 있음	주민 및 자원 단체	정부 부처의 주도권 경쟁, 민간단체 운영에 위탁할 경우 정부의 의향대로 운영되거나, 관련 예산의 배분 역할을 수행하는
디자인을 정책으로 인식하지 않고 인간이 당연히 갖추어야 할 문화로 인식하여 문화재나 자연 경관의 가치인식과 자부심을 지님	인식확산	공공디자인 저변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소득, 지적 문화적 수준, 시민의식 등 전반적 사회 수준 상승이 필수적이며 다양한 전환 기회가 요구됨

(표40)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문제점

제 5장 정책 제안

1. 영역 및 대상

1. 충남의 공공디자인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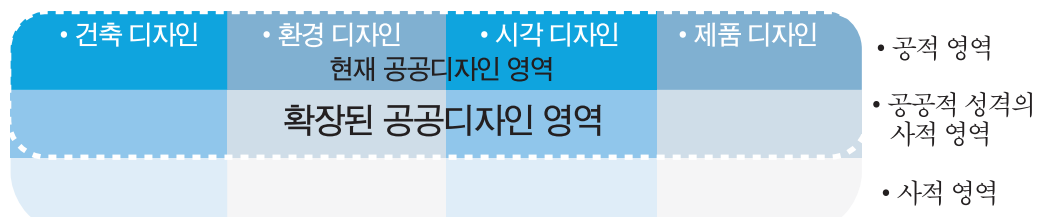
공공디자인이 도입되면서 정부 부처는 물론 건축 및 도시계획, 미술, 분야별 디자인 전문가 집단에서 각자의 분야와 합치하는 정의 및 영역을 앞다투어 제시하고 있다. 공공디자인이 다양한 분야가 참여하고 융합하여 이루어야 할 대상임에도 이러한 경쟁적인 영역 다툼은 급기야는 그 동안 디자인의 대표격인 산업 디자인과 분명하게 구분지으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립과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여건과 현실에 적합한 전문가와 사업자, 공무원 및 주민들이 공감하는 정의를 정립하여야 한다.

(1) 경관과 연계 및 차별성

- 경관법에 명시된 정의를 살펴보면,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을 보전하고 도시·농산어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이라는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과 역사·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충청남도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영역을 더욱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2) 공적 영역의 확장

-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의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을 공공디자인 정책에 의해 심미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이 본래 추구하는 의미와 영역을 가장 적절하게 규명하고 있다.
- 그러나 이 정의가 설치·제작 주체 위주의 관점으로 사용자가 언급되지 않았으며, 최근 도출되고 있는 사적 영역이면서도 공공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물의 외벽, 상점 간판 등과 같은 공공 성격의 사적 영역도 포함 되어야 한다.



(표41)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확장 영역

2. 공공디자인의 대상

충청남도는 도농복합형태의 광역도이기 때문에 도시 뿐 아니라 농·산·어·촌 지역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요구되는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축물이나 시설물과 같은 고정적인 요소외에도 아치나 현수막과 같이 표면에 부착되며 설치와 철거가 쉽게 이루어지는 그래픽 물과 같이 지역 환경에 분명하게 존재하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영역을 비롯하여, 공공디자인 정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공공성격을 띤 사유 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듯 대상을 세분하는 목적은 까다로운 적용이나 규제가 아니라 대상에 따라 탄력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활용을 확대시키려는데 있다.

(1) 공공디자인 대상 원칙

- 공공디자인에 포함시키려는 대상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농·산·어촌 유형의 공간 및 시설물의 포함
 - ② 공동주택 담장,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벽면, 상가 간판 등 공공 성격 사유물
 - ③ 사업비를 집행하는 담당 부서에 따른 항목
 - ④ 매체를 이용한 도정 홍보(물), 각종 서식류, 상징물 등
 - ⑤ 그래픽물, 벽화 등 설치 및 철거가 용이한 시각 디자인물
 - ⑥ 도에서 직접 주관하는 사업, 광역지역(2개 이상의 시·군, 광역시도와의 경계)으로 도의 중재가 요구되는 사업, 중앙 및 시군 자체 사업 등으로 구분
- 공공디자인 대상의 확장된 분류안은 아래와 같다.

대분류	소분류	세분화 된 대상
공공공간	공간환경	• 공원 (소공원 포함) • 광장, 운동장 • 어린이놀이터 • 교량 (철도교 포함) • 고가도로 • 지하차도 • 터널 • 보도 • 자전거도로 • 농산어촌 공간 포함
	공공건축물	• 도 소관의 공공 건축물 • 중앙 및 타 기관 건축물 (경찰서, 학교 등)
공공시설물	교통 시설 (항만 시설)	• 가로등 • 도로명판 • 볼라드 • 펜스 • 방음벽 • 높이 2m 이상인 석축 및 옹벽 • 육교 • 지하도 • 택시 • 버스 등 대중교통 승차대 • 정류소 시설물 및 표지판 • 자전거보관대, 주차안내 표지판,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 포함) • 지하철 안내표지판 • 환기구(흡배기구) •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 항만과 관련된 여객 터미널 안전 시설 등의 포함
	편의시설	• 벤치 • 의자 • 쉼터 • 파고라 • 휴지통 • 음수대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공급시설	• 분 • 배전함 • 우체통, 소화전, 상수도 제어함, 신호등 제어함 • 공중전화 부스 이와 유사한 시설
	기타시설	• 가로수보호대 • 가로화분대 • 가로녹지대 • 분수대 • 분수대 • 맨홀뚜껑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공공매체	정보매체	• 이정표 • 안내표지판 • 방향유도 표시 • 규제사인 • 관광안내도 • 대기오염전광판 • 버스노선도 • 지하철 노선도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벽화 • 슈퍼그래픽 • 생활정보지 배부함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광고매체	• 매체를 활용한 지자체 홍보물
	가변매체	• 설치, 제거가 용이한 그래픽 물 (현수막, 행사탑 등)
공공용품		• 공공기관의 차량 외장, 각종 서식류, 기념품, 상징물 등

(표42)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대상(안)

2. 기본 방향

1. 역할 분담 및 행정 전략

(1) 공공디자인 사업의 역할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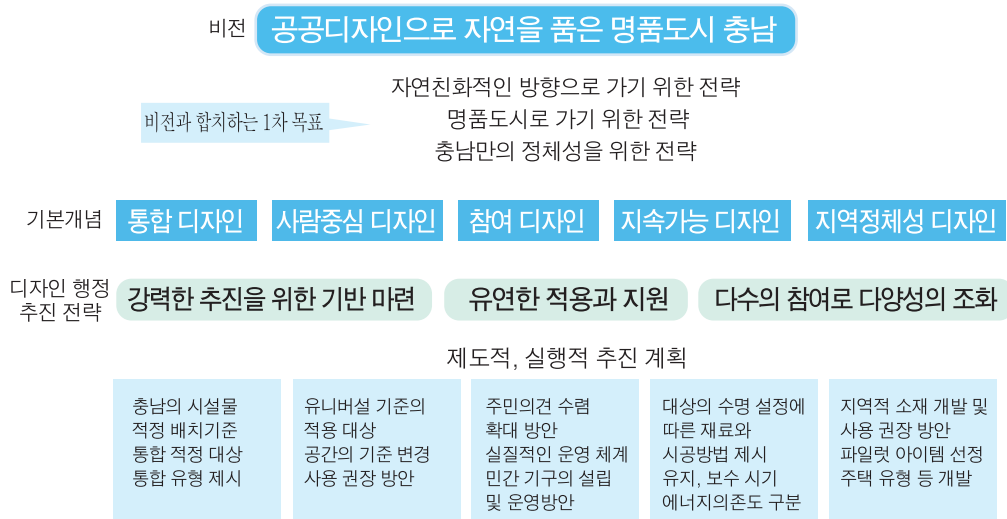
공공디자인을 관장하는 중앙 부처의 결정 및 디자인 진흥 정책에서 명확한 노선과 정책 방향을 보여주지 못하면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정책 방향 설정은 물론 조직 구성에도 혼선을 가져오게 된다. 중앙 및 광역 기초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명확한 사업방향 설정과 아울러 정책 및 사업 수행 범위를 각기 분담하여야 한다.

중앙부처 기본 정책 설정 평가 및 프로모션 재정 마련 및 지원 마인드 확산 (국민 홍보)	광역지자체 계획 마련 및 가이드라인 제정 중앙공모사업 선발 및 계획 제안 등 지원 주민 의식 향상 및 교육	기초지자체 사업별 구체계획 사업 공모 대상물 설치 및 유지 마인드 확산 (국민 홍보)
---	---	---

(2) 기본 방향과 전략의 연계 강화

디자인의 전개 방법 중 핵심이 되는 것으로 다루어지는 요소의 강약 조절과 규모의 비중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조율하느냐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이 가장 부합되게 활용되는 분야로 공공디자인을 들 수 있다. 공공디자인이 추구하는 본질인 ‘자신의 존재와 주장을 최소화 하며 상대를 배려하는 디자인’이라는 기본 기조는 전체 속으로의 동일화, 주변과의 조화, 규모의 적절성, 이미지 표현 방식 등은 물론 의견 조율 과정에서도 서로가 일치되는 개념과 경향이 담겨야 한다.

또한 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행정이 갖추어야 할 강도, 진행 속도, 대화 태도 등의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복합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표43)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비전

2. 법제 운용

(1) 복수 조례 운용에 따른 혼란

-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관조례, 도시디자인조례, 공공디자인조례 중 2개 이상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는 사례로는 서울시(경관 조례, 도시디자인 조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경관 조례와 공공디자인 조례)가 있으며 경관조례만 제정 운영하는 지자체는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충북, 전북, 전남, 경남이며 충남은 공공디자인 조례만을 운용하고 있다.
- 각기 조례에 대한 위상도 제각기 달라 인천, 광주, 대전, 전남이 경관 범주에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이 포함되는 체계이며, 서울과 대구가 도시디자인 범주에 경관과 공공디자인이 포함되고 있다.



(표44) 경관 및 디자인 법규 위상

(2) 경관조례 제정에 따른 명확한 차별

- 광역지자체 사례의 대부분이 경관조례와 공공디자인 조례를 중복 운용하지 않고 있는것은 두 조례 사이에 공통점이 많다는 것이다.
제정 예정인 충청남도 경관 조례에는 공공디자인 조례와 유사하거나 더욱 광범위하고 상위 체계의 사업 범위, 지원 방안,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됨에 경관 조례에는 도시계획 차원의 용도 구분과 법차원의 근거를 받는 실행 내용을 담아야 하며 공공디자인 조례는 실행 성격 차원의 내용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3) 다각적인 법률 연계

- 공공디자인 조례는 법적 구속력에 한계를 가지는 규제로서 단독으로 적용하기에는 실효성에 제한을 받을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직·간접으로 관련된 법인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및 문화재청, 산림청, 소방방재청 별로 제정되어 있는 법률의 다각적 활용이 필요하다. 관련 법률은 일정 부분 상호 연관을 갖기 때문에 공공디자인 조례의 단독에 의하지 않고 다른 법안 및 조례와 연계해 복합적으로 활용 대응하여야 하며 특히, 근거법의 테두리에 있는 경관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이러한 연계 태세는 규제 적용에 있어 효율성 뿐 아니라 각종 위원회 및 심의 과정에서 연관된 부서의 업무 협조를 요구하게되어 조직간 커뮤니케이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3. 전담 조직 구성

1. 공공디자인 부서의 기능

(1) 단계별 기능 확대

공공디자인 관련 조직 구성시기가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 보다 앞선 시기에 큰 조직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기초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실행사업이 있기 때문에 광역지자체와는 달리 사업영역과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실질적인 사업의 수행보다는 도 차원의 정책개발, 광역지역(시·군 경계 지역) 및 인접한 지역의 전체 이미지 유지와 조율, 도 단위 공공디자인 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정 및 제시와 실행 여부 코치, 중앙 부처 공모사업의 정보 및 제안 중간 점검 기능, 도 단위의 관련 경연대회 실시로 능력 제고에 주력하는 등 도 차원에서 하여야 할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도청내에서도 성급한 업무 이양 요구나 간여 보다 코칭 기능으로 시작하여 존재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

- | | |
|------|---|
| 1 단계 | 도내 디자인 관련 업무의 현재와 같은 수행 체계를 유지하며 코칭기능 |
| 2 단계 | 건축관련 영역에서 전반적인 영역으로 범위 확대(영역 및 규모 확대) |
| 3 단계 | 도 및 시군의 디자인 관련 사업 수립, 진행 과정에 가이드 라인 적용 체크 |

(2) 재정 확충 강화

- 도가 운영하는 사업이 기초지자체에게 호응을 받을 수 가장 수월한 방안은 도에서 직접 사업비를 지원하느냐의 여부이다. 현재는 기초지자체에서는 중앙 공모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앙공모사업의 제안 방식의 수준 향상 및 인사 교류 등 정보력 향상과 함께 도 자체 예산 마련 및 확대도 시급히 요구된다.

(3) 복합적인 디자인 기능

- 현재와 같은 부서 조직으로는 제한된 영역만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도로 시설, 매체 및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또는 인력이 요구된다. 5명 규모로는 현재 수행 업무 및 사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 규모에 맞는 조직의 재 구성이 요구된다.

(4) 전문 인력 양성

- 외부 전문 계약직 활용 방안과 신규 디자인직의 점진적인 채용과 아울러 행정, 건축 등 내부 공무원의 전문화를 통한 전문직 양성이 필요하며 잦은 보직 순환제도의 보완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전문 인력 양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5) 전문 인력 양성

- 공공디자인 사업이 예산 조성 등 타 부서의 협조가 요구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간의 횡적인 협의시스템을 갖추어 추진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업의 운영에 비중을 두기 보다는 민간과 행정간의 중재와 조정, 그리고 행정부서간의 조정협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 및 중재 조정을 전담하는 행정 보직의 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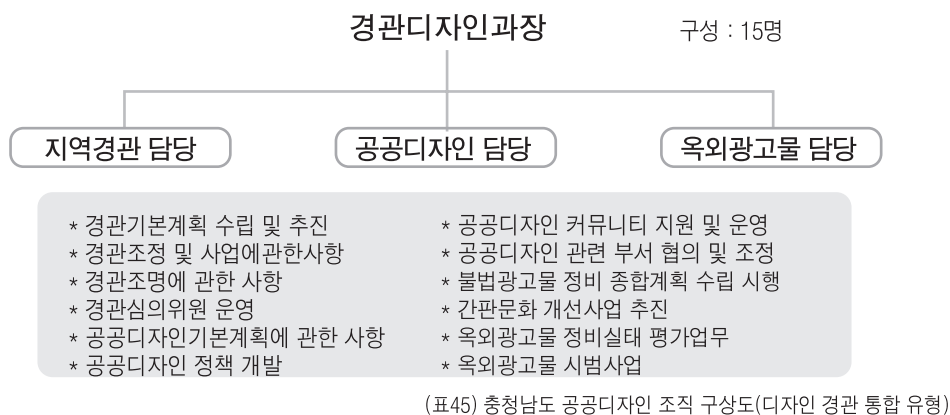
2. 공공디자인 부서 체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전담 조직의 직제 및 규모는 조직의 현재의 역할과 예측되는 수요와 분야에 따라 조정 되어야 하며 현재 기능 외에 경관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신설이 계획됨에 따라 전반적인 조직 재구성이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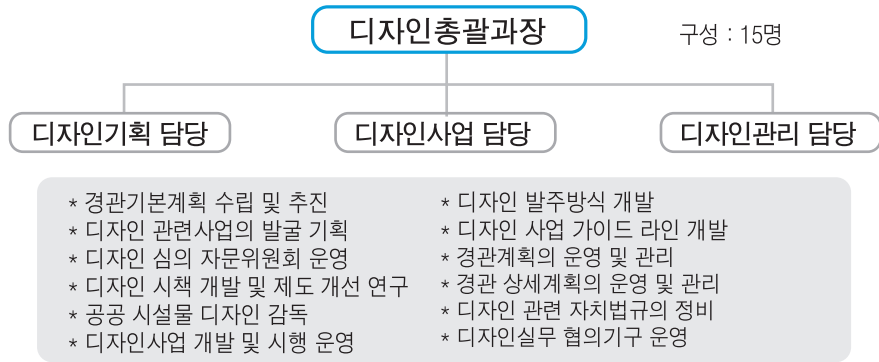
공공디자인 부서가 신설 조직이기 때문에 업무 특성인 총괄적인 기획과 사업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기위한 추진력과 의사 결정권, 집행력이 미약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단체장 직속 또는 영향력 있는 기획총괄을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도 단위의 다변화된 관련 업무와 관련 부서나 기초지자체와의 업무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단 형태 보다는 정규 조직인 실국에 소속되는 부서 형태가 바람직하다.

첫번째 모델은 경관과 공공디자인 및 옥외광고물 관리기능이 막라된 디자인 경관 통합 유형으로 소속은 건설교통국 산하로 '경관디자인과' (가칭)이며, 지역경관담당, 공공디자인 담당, 옥외광고물 담당으로 15명 규모로 구성한다.



두번째 모델은 공공디자인 위주의 조직 형태로 경관 업무는 디자인 관리담당에서 다 이루어지며 각 담당별로 행정직과 건축 토목직외에 디자인 전문직으로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표46)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직 구성도(디자인 위주 유형)

공공디자인 인식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53%가 선호하는 조직 구성 형태인 디자인 전문직과 행정직이 절충된 유형으로 구상 되었으며 과(課) 단위의 규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나 전문직 중 어느 쪽이 업무를 관장하더라도 유연하게 운영 될 수 있는 조직 유형이다.

3. 인식 및 기반 확산

1. 공공디자인 교육 체계화

공공디자인 관련된 충청남도 공무원 대상의 교육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교육과정과 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에서 실시하는 시·군 순회 교육, 도나 연구원, 시·군등에서 이루어지는 세미나 형식의 소규모 교육 등이 있다.

- ①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도 및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원은 30~40명, 기간은 3~5일 과정이며 디자인 기초부터 공공디자인 의미 등 기초에서 사례 답사, 적용 기법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과목으로 운영 된다.
- ② 시·군 순회교육은 관련 직종을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100 여명 규모의 특강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공공디자인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과정이며 대상 지역에 적합한 관련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 주최나 규모에 관계 없이 수시로 이루어진다.

(1) 교육 내용의 변화

- 공공디자인 관련 교육이나 특강이 운영 된지 2년 여가 되었지만 정규화 된 교과목이나 관련 교재가 아직 갖추어지지 못하였으며 해당 분야의 직접적인 전문가의 희소로 시각 디자인, 환경 디자인, 도시계획, 건축, 색채, 조경, 미술 등 여러 분야를 혼재되어 다루고 있다.

이러한 운영 여건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교육 내용이 선진 사례와 이와 대비되는 우리의 조악한 환경 현황으로 동일한 내용이 여러번 반복되어 전달되면서 교육 내용의 참신함이 떨어지고 있다.

(2) 교육 과정의 등급화

1년에 1회 이루어지는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을 정예화 및 단계화 하여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직능교육화 할 필요가 있다.

교육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초급에서는 디자인 기초, 조형, 건축 및 디자인사 등 디자인 전반에 대한 인식과 조형미의 판단 지식을 습득하고, 중급 단계에서는 건축, 조경, 환경 등 실무 전반에 걸친 과정으로 심화하며 고급 단계에서는 정책 수립, 사업 수립 및 수행,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과정으로 세분화 되어야 한다.

초급 단계	디자인 기초, 조형, 건축 및 디자인사 등의 교과목을 통한 디자인 전반에 대한 인식과 조형미의 판단 지식 습득
중급 단계	공공디자인, 건축, 조경, 환경 등 실무 전반에 걸친 과정으로 심화 학습
상급 단계	정책 수립, 사업 수립 및 수행, 사업자 선정 방법, 주변 기관의 활용,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운영 기법 위주의 교과목

(표47) 공공디자인 교육과정 별 내용

(3) 단체장 및 부단체장 대상 특강의 활성화

공공디자인 사업을 수행에 있어 중앙 및 지방 단체장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치 인식과 정책의 수립 의지가 중요시 된다. 공공디자인 의식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디자인 사업에 있어 가장 큰 주도력을 행사하는 위치의 단체장 및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 등의 과정이 별도로 기획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2. 민간홍보 방안

공공디자인 사업을 공급자인 정부 및 지자체 관점에서 이해되고 계획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공공디자인 사업의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의 인식 전환과 참여 없이는 사업의 성과를 이루기는 어려우며 이는 경관 및 도시계획 과정에서 여실히 잘 나타나고 있다.

(1) 오피니언 리더의 집중 홍보

지역 주민 의견과 여론 향성에 주도력을 가진 지역 대표 및 상인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실성 있고 체계적인 홍보 구사가 필요하다.

(2) 홍보 방법 및 매체 변화

교재나 영상물에 의한 홍보 및 교육을 지양하고 선진 지역 답사 방법 등으로 실제 체험하고 실감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하여 공공디자인의 혜택의 최대 수혜자이며 운영자가 주민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4. 실행력 증대

1.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경관, 공공건축, 공공디자인, 공공미술, 경관조명, 조경, 토목 교량, 공무원, 언론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5명으로 ‘충청남도공공디자인위원회’가 구성되어 자문 및 심의활동을 펼치고 있다.

심의 대상은 공공디자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사항,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도비가 지원되는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이다.

(1) 유사 위원회와 연계 운영

- 도에서 운영 중인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위원회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 공중화장실 부문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공공디자인과 관련 있는 사항의 심의 활동을 이미 수행하고 있으며 경관위원회가 발족될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 같이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를 복수 운영되면서 유사 안건의 중복 심의 등 비효율적인 면이 발생하여 통합된 단일 위원회로 운영하자는 구상도 제기되고 있다. 공공디자인이 도입되는 초기 단계의 인식 확산이 미흡한 기반에서 강한 행정력, 통합된 기능을 갖춰 신속하게 결정되는 시스템이 요구되겠지만 다수의 의견을 조화롭게 조율시켜 나가는 과정을 중요시 하는 공공디자인의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다수의 위원회는 그대로 유지하되 심의 성격에 따라 복수의 위원회로 이루어지는 심의회로 운영해 나가는것이 바람직하다. 운영은 사안 발생시 요구되는 각 분야의 소위원회가 모여져 연합으로 구성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2) 대상의 구분

심의에 부여된 안건을 중요성 여부와 실제 심의 후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상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살피고 후속 조치가 이행될 수 있는 심의 대상과 단순히 자문으로 이루어지는 대상으로 구분하도록 하며, 심의 대상 중 수정 및 변경이 요구된 안건의 해당 내용에 대한 구속력을 제도화 하여 심의 및 자문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사업 수행의 여부 판단 기능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은 진행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중간 심의나 자문보다는 시행하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데 있어야 한다. 사업의 초기 계획 단계나 공모 사업 제출시 사업 대상 및 장소, 규모의 적정성, 주위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업 수행 여부를 사업 초기부터 판단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4) 도자체의 자생력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 사업이나 기구 설립에 소요되는 재원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면서 총체적이고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성격의 사업이 본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거나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충청남도과 시군이 제안하는 중앙공모사업에 대처도 도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정보 전달과 제안 방식 및 제안 내용의 수준 향상 등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도 자체의 재정 마련 방안도 병행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들의 건설사업 대한 디자인, 건축 등 선별적인 관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방식을 통한 민간 컨소시엄의 활용의 도입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2. 민간 단체의 활성화 방안

공공디자인 정책을 떠나감에 있어 중앙 정부의 역할이 공공디자인 정책 근간의 수립과 운용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있다면, 실질적인 사업은 도에서의 직접 운영 보다는 활용 방안에 익숙하고 유연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민간 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하는것이 바람직 하다.

충청남도에서는 지역 디자인 정책 수립 및 도차원의 마스터 플랜이나 기본이 되는 규정 등 정책 방향이 담겨진 공공디자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민간기구의 육성 과 활용을 하여야 한다.

(1) 도와 시군의 분명한 역할 분담

- 도나 시군에서 공공디자인을 도입하면서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영역까지 확장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의도가 오히려 초기 관련 조직의 자생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도와 시군 담당 부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 실질적인 사업은 과감히 민간 영역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디자인 분야의 통합 체계

- 중앙부처의 공공디자인 주무 부처가 명확하게 단일화 되지 않은 가운데 산업 디자인 부문은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정책 수립 및 연구기능을 갖추며 공공디자인 부문은 문화관광체육부 소관이 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중앙 부처와는 달리 광역지자체에서는 건설 관련 부서가 공공디자인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광역도의 경우에는 그러한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디자인 정책과 실질적인 사업을 주도할 민간 단체의 경우 중앙과 같이 이원화 시키기 보다는 산업디자인 부문과 공공디자인 부문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일 체제의 민간단체 형태가 적합할 것이다.

(3) 디자인 거점센터 설립

- 공공디자인 분야를 기존의 산업디자인 부문과 명확하게 분리하는 추세이지만 공공디자인에 소요되는 다양한 분야가 투입되는 융합체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양 부문을 동반하여 이끌고 나가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디자인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한국디자인 진흥원외에 광주, 부산, 대구에 지역별 디자인거점센터가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충청권에서는 대전충청디자인센터가 준립하지만 대전 지역에 치우친 사업 운영으로 충남에서 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공공디자인 사업 운영 역시 도 및 각 시군에서 행정 고유의 영역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영역까지 확대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으나 실행 사업은 민간 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운영 방향이다.
- 중앙 지원 또는 도와 시군이 공동 출연하는 형태의 충남디자인센터의 건립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6장 결론

1. 요약 및 결론

지역 품격을 높이는 지역 계획 기법의 하나인 공공디자인을 새로운 지역 이미지 창출 방안으로 도입하는 지자체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공공디자인을 도입하기 이전에도 다양한 방법의 지역 계획 기법이 등장하였으나 제대로 된 활용과 성과를 얻기도 전에 새로운 방식의 재도입이 거듭됐던 경험을 살려볼때 공공디자인의 본격적인 도입과 운용에 앞서 그 본질과 활용방안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특히 광역도인 충청남도에서는 광역시나 기초지자체와는 달리 도 전체 이미지의 조율이나 사업 전개에 따른 상호 교감을 이루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중앙 정부와 기초지자체 사이에서 도의 역할과 충청남도라는 여건과 현황에 적합한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하며 공공디자인의 방향과 운영이 다음과 같이 요구된다.

첫째로 충청남도 지역의 실정과 여건에 적합한 목표와 대상 전개 방안의 수립이다. 흔히 지자체에서의 디자인 분야의 활용을 보게 되면 지역 상징성을 증폭시키기 위하여 독특한 외관, 압도적인 규모, 의미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조형물이나 건축물의 조성 및 설치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 그렇게 실행되고 있다.

공공디자인에 있어 지역의 특성이나 차별성을 우선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외관의 독특함을 통해 상대와의 차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자연 환경이나 역사성과 자연스럽게 부합되며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품위있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 모색인 것이다. 여기에 공공디자인을 추진하는 행정기관의 주민과의 대화 방법이나 의견 수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충남이 반드시 구사되어야 할 독특한 전략이나 프로세스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에서 공공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추구하고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설정되고 그 목표와 충청남도의 현실, 성격, 수준에 따른 대상의 설정이 따라야 한다. 이미 이 분야의 선도 지역인 대도시가 추구하는 자연으로의 회귀나 조화, 도회지 위주의 공간이나 시설물 외에 농산어촌, 소도시에서 요구되는 대상과 목표수준의 설정이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이 다루어야 할 영역인 것이다.

둘째로 지역이 가고자 하는 목표와 대상이 정립되었으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행정 조직과 측면에서 지원 역할을 수행할 민간조직의 구성이 계획 되어야 한다. 도입 초기에는 어느 지자체든 의욕이 앞서 디자인에 관련된 전 분야를 수행하는 큰 규모의 위상 높은 조직을 구상하게 된다. 하지만 공공디자인 사업이 갑자기 생겨난 영역이 아닌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주도권이 쉽게 이전되기 어려우며 급격하게 확장 하려다 보면 사업기획 및 진행과정에서의 부

서 또는 기관간의 협조 및 지원을 원활하게 받기 어렵게 된다. 더구나 충청남도는 중앙부처와 기초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각기 분담하여 수행하는 구분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공공디자인 도입 시기부터 각기의 역할과 기능 분담이 전제되고 준비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충청남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광역지자체 특히 광역도의 고민 중 하나가 도내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한 간여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할 지가 가장 관건이다. 도차원에서는 공공디자인 운용에 대하여 도가 이끌어가야 할 큰 틀에서의 목표와 비전과 기준이 되는 지침을 제시해주며, 팔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규제 마련으로 기초지자체에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실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아야 한다.

충남도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실질적인 사업의 수행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조직간 기관간의 대화와 조정 기능에 비중을 두고 이를 수행하는 보직의 마련도 중요하다. 민간기관의 설치 및 지원은 산업디자인과 공공디자인 및 문화 부문을 구분 짓지 말고 통합기능을 갖춘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유형을 원칙으로 하되, 도와 시·군이 공동 출연한 형태의 디자인거점센터의 설치가 충청남도에서는 시급하다.

셋째로 공공디자인 실효성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구속력과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공공디자인 사업이 일정한 규칙을 지니며 진행 될 수 있는 사업 전 평가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 공공디자인의 본질인 설치의 최소성 및 통합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진행 사업의 심의나 자문의 수준을 벗어나 사업의 계획 구상 단계에서 부터 사업의 수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

규제 차원에서도 경관법에 근거한 경관조례와 공공디자인 조례와의 위상정립을 분명히 한 후, 관련된 다른 법률과 연계한다면 권고 수준의 느슨한 운용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다.

넷째로 디자인 사업에 전개에 있어 가장 관건은 소요되는 재정의 확충을 들 수 있다. 현재는 중앙 부처의 공모사업에 의존도가 높아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연계성 있는 사업구상에는 한계가 있다.

충청남도 주도의 중앙공모사업의 체계적인 정보 전달과 제안서 작성 방안 지원 등으로 공모 사업에 적극적인 대처와 동시에 도 자체적인 재정 마련도 병행하여야 한다. 건설사들의 건설사업 대한 디자인, 건축 등 선별적인 관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방식을 통한 민간 컨소시엄의 활용 및 도입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광역도 차원에서 공공디자인의 역할은 행정 구역의 결속 뿐 아니라 역사 문화적 정서를 공유하게 하며, 이미 형성된 지역 단위의 이미지를 분명하게 하며 지속적인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그럼에도 민선 도입 이후 제각기의 색깔내기에 급급한 기초지자체의 지역 이미지 조율을 원활히 하기에는 중앙정부의 기조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광역도 위치에서 도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 계획을 갖추고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면 공공디자인을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따른 성과에 다가설 수 있다.

2. 연구 특징 및 한계

- 행정 일선의 공공디자인 조직 담당자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디자인 전문직이 아닌 이유보다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담당하여야 할 업무의 영역에 대한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 이런 여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는 정책 보고서가 실무를 진행하면서 요구되는 기준과 자료, 정보 등이 담긴 기초 텍스트북 개념으로 구성되는 것이 유리하며, 디자인 관련 부서에서 관련 업무의 통합과 실질적인 디자인 업무의 수행을 위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일반적인 것에 반해 중앙 및 기초지자체 사이를 이어주는 위치에서의 실질적인 조정 기능의 부각, 기존 업무 소관을 그대로 분산시키면서 조정 조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효율적이다.
- 공공디자인 분야가 새롭게 도출된 분야로 인식도가 매우 낮으며 해외의 경우 명확하게 구분된 영역이 모호해 사례 수집이 어려운 현실이다.
 - 유럽의 경우 공공디자인이라는 구분된 부문이 존재하지 않고 도시 디자인이나 환경디자인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도시디자인이라는 세분된 영역이 있지만 대개는 경관의 범주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국내는 경관과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이 혼재되어 동시에 다루어지고 있음
- 공공디자인이 도입되기 시작한 시기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개념, 방향, 담겨야 할 내용 등을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대도시 지자체에서 수립했기 때문에 광역도에서 적용되기가 어려우며 이와 다르게 도농 복합 양상으로 전환하려하면 기준에서 어긋난 것으로 인식된다.
- 전담조직 구성 등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료 수집의 어려움은 물론 현재 시행되는 자체 평가 등에서 원하는 응답을 얻기에는 단계가 이르다.

참고자료 및 문헌

- 임만택, 공공문화에서의 공공 디자인, 건축, 2009, 5
- 정경석 외, 새로운 도시전략으로서의 공공디자인과 지자체의 역할, 경남발전지, 2008, 7
- 이유미, 공공디자인 정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2007. 8, 조선대학교
- 공공디자인사업 가이드라인, 2009,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지자체 디자인행정 매뉴얼, 2007, 산업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 박찬숙 외, 일본 경제 공공디자인으로 다시 살아나다, 2007. 10, 가인출판
- 박찬숙 외, 유럽의 도시 공공디자인을 읽다, 2007. 10, 가인출판
- 박찬숙, 쾌적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정책보고서, 2006.

참고 웹사이트

-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 <http://design.seoul.go.kr>
- 디자인 경기 <http://design.gg.go.kr>
- 각 광역지자체 홈페이지

집필자

연구책임 · 권영현 충남발전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연구위원
이충훈 충남발전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연구위원

공동연구 · 이정수 충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기본연구 2009-21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직구성과 운영방안

글쓴이 · 권영현, 이충훈, 이정수 / 발행자 · 김용웅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09년 12월 31일 / 발행 · 2009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금홍동 101 (314-140)
전화 · 041-840-1250(직통),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109-0 03350

<http://www.cdi.re.kr>

©2009.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